

발 간 등 록 번 호

12-B553015-000033-01

정책보고서 2015-47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김문길 · 김미곤 · 김태완 · 최민정 · 이세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

이세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은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적인 인적 자본 수준은 역대 최고의 스펙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첫 일자리로 선택한 일자리의 질 또한 이전 세대들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OECD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직업역량과 노동시장 성과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청년들은 현재와 미래의 생산과 소비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세대다. 그리고 이들의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 여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규모와 생활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청년문제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청년의 빈곤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가장 위험집단은 노인세대다. 노인세대의 약 절반이 빈곤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빈곤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노인으로 향해 있다. 그런데,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빈곤위험세대가 노인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은 아동과 청년의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청년빈곤 또는 청년근로빈곤은 지표상으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빈곤의 지속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청년빈곤 또는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문길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 김태완 연구위원, 최민정 초빙연구원, 그리고 이세미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층인터뷰에 응해준 청년들은 본 연구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건승을 기원한다. 그리고 스스로 청년이면서 청년문제에 천착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거리를 줘어

준 전문가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면서 세심한 검토와 건설적인 제안을 해준 청년위원회의 박선옥 과장과 김향덕 주무관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연구는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청년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의 단초가 되기를, 나아가 청년문제에 대한 새롭고 진지한 고민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연구진들의 견해로써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3
제1절 문제제기	15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21
제2장 이론적 검토	23
제1절 청년의 정의	25
제2절 청년세대의 현황	27
제3절 선행연구	40
제4절 국내외 정책 사례	46
제3장 청년근로빈곤의 규모와 실태	57
제1절 청년빈곤 및 근로빈곤 개념	59
제2절 청년근로빈곤 바로보기	65
제3절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72
제4장 청년근로빈곤 사례분석	83
제1절 근로	86
제2절 빈곤	98
제3절 인식과 태도	110
제4절 사회통합	122
제5절 복지경험과 복지욕구	126

제5장 결론과 정책제언	133
제1절 결론	135
제2절 정책제언	137
 참고문헌	 149

표 목차

〈표 1- 1〉 생애주기별 법령 및 자치법규 수	18
〈표 2- 1〉 '현실 속 장그래' 지표	30
〈표 2- 2〉 연령대별 비정규직 규모 변화	31
〈표 2- 3〉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32
〈표 2- 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연령대별 비중	33
〈표 2- 5〉 연도별 자영업자 진입과 퇴출 현황: 2011~2013년	34
〈표 2- 6〉 밀레니얼 세대 인식과 태도	35
〈표 2- 7〉 근로관련 빈곤율 변화 추이(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38
〈표 2- 8〉 주요국 청년층(15~24세) 고용률/실업률	42
〈표 2- 9〉 활동상태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43
〈표 2-10〉 4·15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4.15.)	47
〈표 2-11〉 OECD 청년실천계획 주요 내용	50
〈표 2-12〉 주요국의 OECD 청년실천계획 이행 상황	51
〈표 2-13〉 OECD의 우선 지원 청년그룹	52
〈표 3- 1〉 각 나라(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61
〈표 3- 2〉 국내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64
〈표 3- 3〉 연령대별 소득빈곤 및 근로빈곤 규모 비교	67
〈표 3- 4〉 국내 청년 니트·프리터의 범위	71
〈표 3- 5〉 연령대별 빈곤율 및 연령대별 근로빈곤율 변화	73
〈표 3- 6〉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청년 빈곤 및 근로빈곤 변화(전가구 기준)	74
〈표 3- 7〉 본 연구에서 본 청년근로빈곤 변화	74
〈표 3- 8〉 청년근로빈곤 특성(연령별)	75
〈표 3- 9〉 성별 청년근로빈곤율	75
〈표 3-10〉 가구주 여부별 청년근로빈곤율	76
〈표 3-11〉 교육수준별 청년근로빈곤율	77
〈표 3-12〉 사업장규모별 청년근로빈곤율	77
〈표 3-13〉 근로빈곤층 동태변화	78
〈표 3-14〉 청년근로빈곤층 동태변화	79
〈표 3-15〉 청년주거빈곤율	81
〈표 3-16〉 근로빈곤과 주거빈곤 둘 중 하나를 경험한 청년빈곤율	81

〈표 3-17〉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한 청년빈곤율	82
〈표 3-18〉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한 청년빈곤율(청년 가구주 유무별)	82
〈표 4- 1〉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 추이	86
〈표 4- 2〉 산업별·연령계층별 임금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 증감추이	90
〈표 4- 3〉 연구참여자의 현재, 과거 고용형태와 업종	91
〈표 4- 4〉 청년근로빈곤 연구참여자 특성	131

그림 목차

[그림 2-1] 주요 OECD국가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변화율: 2007-2011	28
[그림 2-2] OECD국가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980년대-2011	28
[그림 2-3] 전체빈곤율, 청년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변화추이	38
[그림 2-4] OECD 국가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비교(2011년)	3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노동시장 조건은 청년에 대해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음.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고용의 질이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임.
 - 현재 청년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대학진학률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가진 세대임에도, 노동시장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동시장에 진입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 문제도 청년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적이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 최근 몇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이 빈곤위험집단으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 OECD 국가의 청년빈곤율은 노인빈곤율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나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노인, 아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은 빈곤정책,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대상이 노인으로 향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음.
 -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는 빈곤율, 근로빈곤율 등 공식적인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등 통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청년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청년은 노력여하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세대라는 보편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음.
 -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어 보임. 중위연령 상승과 중고령층의 높은 투표율은 중고령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청년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
과도 무관하지 않음.

○ 청년세대가 가지는 다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한 시점임.

- (정치적 가치) 민주주의 가치, 인권의식, 탈지역성 등의 정치적 성향 등
- (경제적 가치) 미래의 중산층, 현재의 핵심 생산인구, 현재와 미래의 핵심
소비계층, 혁신과 학습능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
- (사회적 가치) 노인·아동부양자(공적연금 보험료 부담자, 복지재원 조달자)
- (인구적 가치) 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생산주체

○ 한편,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에 따른 근로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청
년층의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청년층이 근로빈곤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 한 번 빈곤을 경험하면 다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빈곤의 점착성
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절실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고통을 나열하고 드러내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노동
시장 내외부의 빈곤청년이 접하는 다양한 사회정책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빈
곤과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헌연구(이론적 검토, 선행연구), 통계분석(가계동향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청년근로빈곤층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이용할 것임.

2. 주요 연구결과

가. 청년근로빈곤을

□ 청년근로빈곤을, 청년빈곤을, 전체 빈곤을 비교

-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취업자 기준 2014년 청년근로빈곤율은 3.6%로, 청년빈곤율 7.0%, 전체 빈곤율 14.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그러나 2010년부터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른 지표들은 완만한 감소세인데 비해 청년근로빈곤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청년빈곤 국제비교

- 우리나라 청년근로빈곤율은 공식 집계를 하지 않아 국제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함. 청년빈곤율은 비교 가능함.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청년빈곤율은 낮은 특징을 보임.

나.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 청년근로빈곤 개념

- 빈곤에 대한 정의는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60%라는 기준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대부분 화폐적 접근의 빈곤정의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근로형태가 추가되는 등 근로빈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구직포기자, NEET, 졸업유예자 등과 부모 경제의존 세대(혹은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따라서 청년근로빈곤을 정의할 때 고전적인 기준인 소득의 화폐적 측면 외에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시장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측면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빈곤의 개념보다는 확대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개념정리가 요구됨. 즉 사회적 배제, 다차원적 빈곤과 같이 확대된 빈곤 개념의 정립이 요구됨.

□ 청년근로빈곤 실태: 통계분석을 기준으로

○ (한국복지패널) 소득빈곤의 경우 2007년 이후 빈곤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 2013년(7.0%)에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평균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청년층에서 다소 증가하였지만 장년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점차 소득 빈곤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기존 OECD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음(OECD, 2011a).
-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근로빈곤의 경우 2014년 청년층 빈곤율(3.6%)에 비해 중장년층의 빈곤율(2014년 7.0%)이 높지만 2010년 대비 빈곤율의 감소폭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커서 빈곤감소효과가 중장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가계동향조사) 소득기준으로 2013년까지 장년빈곤율이 청년빈곤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4년 들어서 청년빈곤율(7.0%)이 장년빈곤율(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장년에 비해 청년의 빈곤감소폭이 적다는 점에서 빈곤 역전 현상이 발생

○ 근로빈곤의 개념을 확장해서 볼 경우 기존의 근로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에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할 경우 2014년 근로빈곤율은 5.9%로 경제활동인구 기준 근로빈곤율(4.4%)보다 1.4%p 증가
- 확장된 근로빈곤과 불안정근로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년층은 2007년 4.4%에서 2014년에는 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및 가구주 여부)별 청년근로빈곤 현황

- (연령대별) 19~25세의 전기청년층과 26~34세의 후기청년층으로 구분해 보면 2011년부터 후기청년층에 비해 전기청년층의 근로빈곤율이 더 높음.
- (성별)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음.
- (가구주 여부) 가구주여부로 비교해보면 비가구주의 빈곤율이 높음.

○ 교육수준별, 사업장 규모별 청년근로빈곤 현황

-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의 청년층이 대학 이상의 청년층에 비해 빈곤을 경

험할 확률이 높았음. 불안정 근로빈곤에서도 학력이 낮은 청년층이 좀 더 불안정한 근로상황에 직면

-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빈곤율이 높음.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청년근로빈곤층 동태변화

- 근로빈곤을 4회 이상 경험한 청년은 13.8%, 2~3회 경험한 청년은 16.5%, 1회의 일시적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12.4%로 분석
 -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이 장기빈곤 경험할 확률이 높음.
- 장기 빈곤경험은 남성, 대학이상, 비가구주,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나타남.

□ 청년주거빈곤

- 2007년 9.8%에서 2013년 8.9%로 소폭 감소. 그러나 전체 주거빈곤율이 9.5%에서 8.1%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임.
- 근로빈곤과 연계해서 보면, 근로빈곤과 주거빈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은 2007년 14.5%에서 2013년 13.2%로 소폭 감소

다. 청년근로빈곤 사례분석

□ 사례연구 방법

-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청년위원회, 청년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고용센터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14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진행
 - 19~34세의 근로빈곤 청년, 또는 과거 근로이력이 있는 빈곤청년 대상
 - 반구조화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족배경, 학창시절, 과거 근로이력, 현재 근로상태와 근로조건, 소득 및 지출 등 가구경제 상황, 인식과 태도, 복지수급 경험과 욕구 등에 대한 질문

□ 근로

- (임금수준) 청년의 근로빈곤은 종사업종과 관련 있음. 숙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제조업보다 숙련을 요하지 않는,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
 -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과거 이력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이는 현재 일자리에 계속 잔류한다 하더라도 저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 학력수준이 높은 대졸자의 경우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해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근로시간) 연구참여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할 만큼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세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 주말근무와 야간근무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야근과 주말근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
 - 긴 노동시간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는 물론,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복리후생) 부당한 처우, 근로기준법 위반, 저임금, 열악한 복리후생의 조건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음.
 - 이미용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일과 학업의 반복) 저학력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다 못해 학업으로 다시 이행하는 사례들이 있었음.
 - 이 같은 역이행의 과정에서 소득공백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의 질 담보가 중요한 조건이 됨.

□ 빈곤

○ 빈곤의 원인

- 부모의 빈곤, 부모의 질병, 부모의 소득상실(실직, 사업실패), 부모의 이혼

○ 부모의 빈곤이 좋은 일자리 진입을 제약하는 메커니즘

- 부모의 빈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학업성취에 악영향
-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노동으로 학업에 몰두하기 어려운 환경

○ 가계수지

- 저임금 일자리로 생활비 충당 어려움. 부모의 부채가 있는 경우 부모의 채무까지 감당하는 경우도 있음.

○ 주거

-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거빈곤에 처한 경우가 많고,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주로 월세의 주거점유형태로 소득대비 임대료 높은 수준

○ 결핍, 박탈

- 부모의 빈곤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축적에 제약
- 취업준비에 있어서도 결핍 경험

□ 인식과 태도

○ 삶의 만족도

- 대체로 삶의 만족도 낮은 수준.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 케이스는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름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한 케이스는 자포자기

○ 현재 가장 큰 고민

- 취업과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음.

- 현재 취업중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도 현재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직에 따른 소득공백을 걱정하고 있음.

○ 미래에 대한 전망

- 미래를 낙관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음. 낙관의 근거는 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나름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임. 나머지 경우는 막연한 희망에 근거한 낙관 또는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적 낙관으로 구분됨.
- 미래 자녀세대에 대한 전망은 자신의 전망에 비해 비관적임. 이는 자신은 빈곤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있고,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하지만 미래 자녀세대에 대해서는 다른 기대를 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음.

○ 결혼과 출산

-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
- 미래 자녀세대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공포감도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성공을 위한 조건

- 성공을 위한 조건(부유한 집안 출신,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 본인의 좋은 학벌, 야망을 갖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사람을 아는 것, 지역 연고, 뇌물을 주는 것, 종교, 성별)에 대해 뚜렷한 하나의 경향은 발견하기 어려움.
- 다만, 현재 삶을 열심히 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발견됨.
- 그렇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는 집안배경이나 사회적 연줄을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아니면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양분됨.

□ 사회통합

○ 사회참여

- 투표 등 사회참여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 정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사회적 자본

- 학업성취와 취업에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 같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정정도 관련성을 가진다 할 때,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가짐.
- 어릴 때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소득상실은 사회적 자본의 단절로 이어져 역시 취업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움.

○ 문화자본, 여가

- 사회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성을 가지는 문화자본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충분하지 않음.
-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문화자본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할 때, '희망키움통장' 등 복지제도에서 문화자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개선이 필요함.

3. 정책제언

가. 현재 근로빈곤층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범위 확대

- 제도 도입 후 수차례 적용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미혼의 청년근로빈곤층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무자녀 단독가구 중에서 적용가능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에 있지만 2017년까지 4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 유자녀 근로빈곤청년에 대한 소득기준과 급여기준 상향, 재산기준의 하향 등의 방안과 더불어 근로빈곤청년에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고민 필요

□ 최저임금 현실화 검토

- 최저임금 인상은 수요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긍정적인 효과와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지님.
 - 사실 최저임금은 빈곤선(중위소득의 50%)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빈곤을 개선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최저임금이 영세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임금 상한선으로 작동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의 해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청년근로빈곤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상폭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청년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정규직 전환율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청년근로빈곤 문제의 해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처우와 청년근로빈곤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나. 미래 근로빈곤층 지원: 취업역량 강화

□ 청년빈곤층 취업역량 강화

- 구직단계에서 필요한 자원들의 적절한 지원은 구직중인 빈곤청년들로 하여금 보다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가칭 ‘공공형 청년취업지원관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음. 일부 대학

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관제도나 청년고용센터의 접근성과 포괄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임.

- 또한 취업스펙 중 중요하게 꼽히는 어학성적, 자격증을 위한 수강을 할 경우 고용보험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예. 근로빈곤 청년이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해 재직중인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조건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이나 실업수당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취업연계 서비스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패키지Ⅱ유형)의 대상자 확대. 현재 청년, 중장년층으로 대상이 넓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청년 중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학생들의 경우는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기존의 고용센터에 복지지원 연계기능을 추가한 고용복지+센터 역시 복지서비스 연계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도 청년에 대한 특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자본, 문화자본 확충

-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법으로 저소득 청년에 대한 사회적 자본, 문화자본 확충을 고민할 필요
 -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장기적·포괄적 관점의 접근법

□ 정부의 취약계층 직접고용

-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국가(Employer of Last Resort, ELR)'라는 개념에 입각한 정부의 고용주 역할 확대 방안 검토

12 청년근로빈곤층(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 최후의 고용주 프로그램은 정부가 모든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기준임금을 받고 일할 준비, 의지, 능력을 가진 모든 무직자를 정부가 고용하는 공공정책임.
-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인도 등의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 검토(장기적 관점)

□ 청년종합실태조사 실시

- 청년층의 성장환경, 교육, 가구경제, 생활실태, 근로, 인식 및 욕구 등을 포괄하는 종합실태조사를 실시

* 주요용어: 청년, 근로, 빈곤

제 1 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제1절 문제제기

1.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청년(靑年). 푸르른 나이라는 뜻이다. 생애주기 상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세대다. 푸르른 나이라는 뜻처럼 청년이 상징하는 것은 활력, 활기, 희망 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연관되는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인터넷 포털에서 청년의 연관검색어를 찾아보면,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실업’, ‘청년 기준’, ‘청년문제’, ‘김치청년’, ‘중소기업 청년’, ‘꿈꾸는 청년’(2015.11.22.20시11분. Naver),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의 나이’, ‘청년의 범위’, ‘청년유니온’,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 일자리’, ‘청년 문제’, ‘청년 실업률’, ‘청년 (구직)수당’, ‘청년 활동비’, ‘청년 펀드’(2015.11.22.20시13분. Daum), ‘청년 나이’, ‘청년실업’, ‘청년닷컴’,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2015.11.22.20시14분. Google)과 같다. 포털마다 이용자의 특성이 다르고, 연관검색어를 배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연관 ‘문제’, ‘실업’, ‘수당’ 등이다. 이 세 단어로 오늘날 청년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보면,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근 일부 지자체의 청년관련 정책이 화제가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고용, 청년실업, 청년수당, 청년일자리 등은 최근 언론이 뜨겁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이다. 현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처럼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고용률을 늘리는 것 이외에 청년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없어 보인다. 즉, 청년문제에 대한 현재의 정책은 고용정책에만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업을 마치고, 근로능력을 가진 세대로서의 청년은 스스로 근로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세대다. 그리고 지금 당장 빈곤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통해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세대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비해 사회정책적 관심이 덜 한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과 관련된 사회정책은 주로 복지보다는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기를 보낸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 충분한 학력을 가지지 못한 청년은 어떨까? 아니면,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체가 건강한 청년이 충분히 자립할 만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자립능력을 갖춘 모든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이들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관심은 주로 노인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해마다 통계가 공개될 때 마다 정부, 정치권, 언론 등에서 큰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12.4%)의 네 배를 넘는 수준이다 보니 각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청년의 빈곤은 어떨까? OECD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청년빈곤율의 평균은 12.2%에서 2010년 13.8%로 증가한 반면, 노인빈곤율의 평균은 같은 기간 15.1%에서 12.4%로 감소했다. 아동빈곤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13.4%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OECD 국가 내에서 빈곤위험집단이 노인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빈곤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연령대별 빈곤율을 제공하고 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는 아동연령층, 근로연령층(18~65세), 노인연령층(66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빈곤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고용특별법”이 정의하는 청년 연령(만 19~34세)에 부합하는 통계는 제공되지 않는 셈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제공되는 소득분배지표에서도 연령층을 근로연령인구(18~65세),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 노인인구(65세 이상)로 구분함으로써 주로 노인빈곤에 통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령대별 빈곤율을 보면, 2014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20대 9.9%, 30대 8.1%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40대 11.3%, 50대 13.0%, 65세 이상 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소득을 공유하기 때문에 2~30대의 빈곤율은 낮게 계측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드러나는 통계상으로 보면 다른 세대, 특히 노인세대의 빈곤율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관심을 끌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청년의 비중을 줄이고 노인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2006년 35.4세에서 2015년 40.8세로 약 10년 동안 5세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연령은 36세에서 40.3세로 역시 약 4세 넘게 증가했다. 중위투표자 이론(median voters theorem)에 따르면 이 같은 인구고령화는 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킨다. 과거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던 시대에는 청년의 이해에 충실한 정책을 제시했다면,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면 노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유권자 구조 고령화로 이어진다. 2007년 18대 총선에서 20대 유권자 비중은 19.2%였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됐다. 20대가 17.8%, 60대 이상이 19.4%였다. 가장 최근의 주요 선거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경우 20대 16.0%, 60대 이상 21.7%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연령대별 투표율 차이는 연령대별 정책우선순위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든다. 내년도 인구구성과 과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감안하여 내년 20대 총선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예측해보면 60대 이상 노인의 투표수가 20대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머니투데이, 2015.11.06. “노인 잡아야 당선’... 내년 총선 60세 이상 투표수, 20대의 2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과 관련한 법령과 자치법규 수를 검색해보면 청년관련 법규 3건, 자치법규 49건으로 나온다.¹⁾ 청년관련 법규 3건 중 두 건은 ‘청년고용특별법’과 그 시행령이고, 나머지 한 건은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생애주기 중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은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청년에 대한 관심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법령이나 자치법규 제목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청년과 관련한 법령이나 자치법규들이 있을 수 있다. 내용상 청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찾을 수 없어 ‘청년’으로 검색된 법령과 자치법규의 수를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 청소년, 노인도 마찬가지다.

〈표 1-1〉 생애주기별 법령 및 자치법규 수

구분	법령	자치법규
아동	23	796
청소년	19	1,565
청년	3	49
노인	13	1,279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청년의 사회경제적 의의

세대로서의 청년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먼저, 경제적으로 청년은 현재의 핵심 생산인구를 구성하는 세대다. 19~34세까지로 청년을 정의한다면 청년은 25~49세로 정의되는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중요한 구성원인 것이다. 이들 핵심생산가능인구는 동시에 핵심적인 소비인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높아진 대학진학률의 주축 세대로서 높은 인적자본수준과 혁신의 역량을 가진 세대다.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아동세대를 부양해야 할 초기 세대다. 이들이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노인과 아동의 복지재원으로 쓰여진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2006년 39.0%에서 2015년 37.0%) 이들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청년세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탈지역성 등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정치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구학적으로 청년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진 핵심세대다. 저출산 문제가 야기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청년세대의 인구학적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청년세대가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은 선배 세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금과 같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던 시절에 신분상승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과거와 같은 환경이라면 청년빈곤, 또는 청년근로빈곤은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년빈곤율이 초기 단계에서 높아

졌다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부터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완 외, 2012).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이 일시적인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후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 유지를 위한 제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통계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에 제공되는 일자리 수는 그리 많지 않고, 또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금수저론’, ‘흙수저론’으로 대변되는 세습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정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교육투자의 정도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교육이 ‘역전의 사다리’로 기능하기보다 ‘세대교착의 알리바이’로 기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지금 청년의 근로빈곤은 미래 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학교교육에서 습득하지 못한 직무능력(skill)은 일자리에서 보충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숙련이 강조되던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서비스화하면서 일자리에서 숙련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청년이 질 낮은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청년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경제적 부담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로 이행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져, 미래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청년으로부터 기술발달, 혁신, 창업의 주체 등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3. 청년근로빈곤, 새로운 이슈

노동은 빈곤탈출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이념의 좌우가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의 이념으로 주로 구현되는데, 사민주의 복지레짐에 속한 나라들조차도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근로연계로 잡고 있다. 그런데, 근로를 하는데도 빈곤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의 분절화 또는 이중구조화가 심화하고 있고, 열악한 쪽에 속한 부문에서 근로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만 하면 빈곤의 위험이 사라진다는 과거의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 영국이 복지개혁안의 원칙 중 하나로 “일자리의 창출만이 아니라 유지와 향상”을 꼽은 것(DWP, 2007)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청년의 근로빈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자리의 질(job quality)은 32개 국가 중 ‘노동시장 안정성’측면에서는 9위, ‘소득의 질’은 23위, ‘근로환경의 질’은 25위로 각각 랭크되었다(OECD, 2014a). 노동시장 안정성을 제외하고는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에는 점착성(sticky)이 있다고 한다. 빈곤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다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은 빈곤이 가지는 상황의존성(state dependence)과 기간종속성(duration dependence)으로 설명이 된다. 근로빈곤의 가장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노동시장에서도 빈곤의 점착성 같은 것이 작동한다. 보통 노동시장 분절이론이 설명하는 것인데, 이 이론이 전제하는 것은 노동시장은 1차 부문과 2차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1차 부문은 좋은 근로조건, 높은 임금, 고용안정, 승진 가능성 등 양질의 일자리로 구성되는 반면, 2차 부문은 열악한 근로조건, 낮은 임금, 고용불안정 등 열악한 일자리로 구성된다. 그런데 2차 부문에 일단 속하게 되면 1차 부문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뒹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Tomlinson and Walker, 2012). 2차 부문에 있는 노동자는 아무리 인적자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단속적 성격 때문에 1차 부문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조금 확대하고, 조금 과장을 덧붙이면 한번 근로빈곤은 영원한 근로빈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을수록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근로빈곤은 가족구조에 의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청년의 고통을 나열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내부와 노동시장의 언저리에 위치해 있는 빈곤청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들에 주목하고, 이것이 이들의 빈곤과 탈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년근로빈곤 나아가 청년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기회구조와 이들이 전망하는 미래, 그리고 탈빈곤을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사례인터뷰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의 근로빈곤 통계가 가지는 현재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청년근로빈곤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연구의 한 축을 구성할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 통계분석, 그리고 사례연구로 이루어졌다. 청년근로빈곤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과 다양한 정책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논의를 전개하는데 활용하였다. 근로빈곤 규모 추정을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서 청년근로빈곤의 동태와 그들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위해서 근로빈곤청년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녹취록을 분석했다. 연구의 착수단계와 종료단계에서 청년관련 단체, 학계전문가, 정책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연구의 방향과 정책제언에 있어서 의견을 참고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청년의 정의

제2절 청년세대의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국내외 정책 사례

제1절 청년의 정의

1. 청년은 누구인가?

한자어인 청년(靑年)을 그대로 풀이하면 ‘푸른 나이’가 된다. 인구의 관점에서는 ‘젊은이’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젊은이는 어떤 나이를 지칭하는 것인가. 젊은이는 인구의 연령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 과거 평균수명이 40세 정도였던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찍이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으니 당연히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린 나이를 청년이라 칭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청년의 나이는 더 많아졌을 것이다. 과거 15세를 일컬어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라는 의미로 지학(志學)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15세와 ‘학문’이라는 말을 병립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는 이립(而立)이 30세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의 30세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 먹고 살 방도(일자리)를 쉽게 찾기 어렵고,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상승하고, 결혼과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30세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닌 듯 하다. 이렇듯 특정 연령을 지칭하는 말은 역사성을 띄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어떤 나이를 일컫는 것일까? 인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중간에 위치한 연령대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성인은 또 어떤 연령대를 지칭하는 것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적 근거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관련한 어찌 보면 유일한 법령은 “청년고용특별법”이다²⁾.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일정비율을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이다.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는 만 19~34세다. 2013년 처음 공포되던 당시에는 만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제외하면 청년과 관련한 법령은 동 법과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다.

19~29세였다가 30대 초반의 미취업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지금과 같이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법령과 달리 청년과 관련된 주요 통계는 다른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의 대상을 만 15~29세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도 같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발표된다. 청년고용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어떤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의 대상은 19~34세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8~34세로 비슷하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15~34세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에서 청년의 연령상한은 34세다. 한편, OECD와 IL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은 15~24세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연령상한 29세, 고용노동부의 연령상한 34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연령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정부나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정의와 달리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령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연령 상한을 34세로 보고 있지만,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반정호, 2010; 정순희, 임은영, 2014). 본 연구와 가장 주제가 근접한 청년근로빈곤을 다룬 연구들(김수정, 2010; 김태완 외, 2012)은 연령 상한을 34세로 두고 있다.

한편, 청년을 연령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행의 관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연령으로 정의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나이는 8세부터다. 이 같은 법정연령을 청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대기적 정의에 치중하기보다 아동기의 비독립(dependency)으로부터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독립으로의 이행기간(period of transition)으로 정의하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다(Fahmy, 2006; Mackie, 2013에서 재인용). 사회경제적 독립을 기준으로 아동기와 성인기를 구분하게 되면, 그 중간에 위치하는 기간을 청년기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Mackie(2013)에 따르면 이 같은 개념 정의는 Galland(1984, 1991)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이행을 완성해야 한다고 봤다. ①학교에서 일자리로(‘직업’이행), ②가족의 집에서 독립적인 주거로(‘주거’이행), ③원 가족(family of origin)에서 새 가족(family of destination)으로(‘가족’이행). 갈랑에 따르면 직업, 주거, 가족의 세 가지 이행을 완성하지 못하면 성인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 이 세 가지 이행을 완성

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Mackie, 2013). 30대 초반, 혹은 그 이후까지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고용률이 저조하고,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행기의 관점에서 청년을 정의할 때, 청년들이 경험하는 성인으로서의 여정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자유와 기회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포장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여정이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는 결국 당사자 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당사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부모의 좋은 배경을 타고난 청년은 어렵지 않게 세 가지의 이행을 완성해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렇지 않은 청년은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난한 청년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상당한 나이가 들어서야 여정을 마칠 수 있거나, 아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결국, 이행의 관점에서의 청년의 정의는 개인의 능력과 배경, 그리고 사회환경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특별법이 정하는 만 18~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주로 근로빈곤층 규모 추정에 이 연령이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2차 통계는 각 통계가 정의하는 연령에 따른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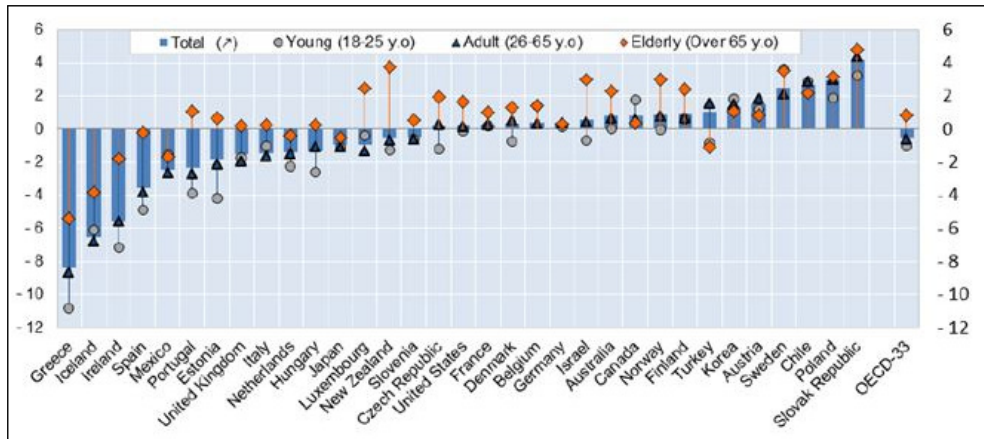
제2절 청년세대의 현황

1. 청년빈곤의 국제적 경향

우리나라에서 청년빈곤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청년빈곤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변화율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노인세대(65세 이상)의 가처분소득은 증가(0.9%)한 반면, 나머지 모든 세대는 감소했다. 그 중에서 청년세대(18~25세)는 연평균 약 1%씩 감소해서 모든 세대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참고로 성인(26~64세)은 0.7% 감소했다. 청년의 소득감소가 가장 큰 나라는 그리스, 아

이슬란드, 아일랜드이고, 다음으로 스페인,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의 순으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청년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타 나라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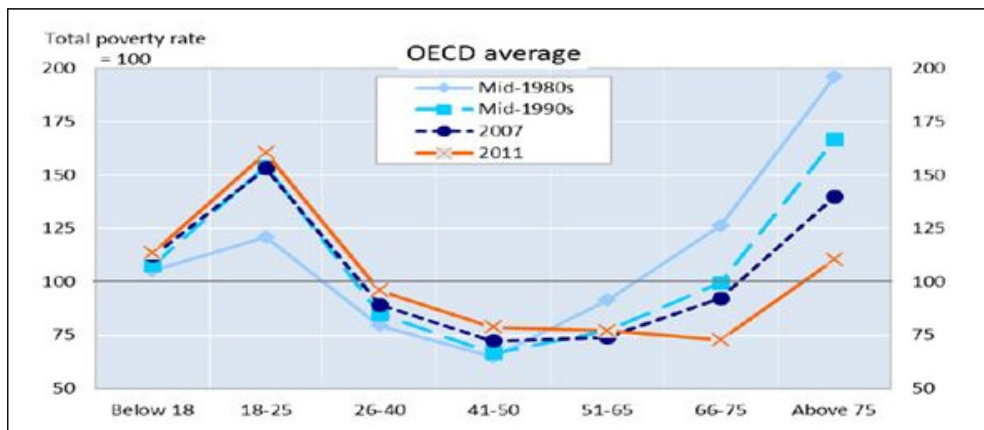
[그림 2-1] 주요 OECD국가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변화율: 2007-2011



자료: OECD(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Income Inequality Update

선진국인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과거의 소득빈곤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은 노인이었다. 그러나 최근 25년 동안 청년이 소득빈곤 위험집단으로 바뀌고 있으며, 최근 경제 위기는 이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2-2] OECD국가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980년대-2011



자료: OECD(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Income Inequality Update

2. 우리나라 청년의 현실

가. “현실 속 장그레”를 보여주는 10가지 숫자³⁾

아래 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4년)와 OECD 자료⁴⁾를 인용해서 언론기사에서 구성한 10가지 지표를 보여준다. 간략한 지표를 통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첫 직장을 1년 이하 계약의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비중은 2008년 11.2%에서 2013년 21.2%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4년에는 19.5%로 조금 감소했지만, 약 7년 사이에 첫 직장을 1년 이하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경력을 바탕으로 정규직으로 이직할 수 있다면 다행스럽겠지만 불행하게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 그리고 19.5%는 아예 실업자가 되고, 69.4%는 그대로 계약직으로 남는다.⁵⁾

1년 이하 계약의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1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10명 중에 1명 남짓하다. 첫 입직부터 빈곤의 위험을 안고 시작하고, 1년 동안 이 위험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3) 연합뉴스(“청년 취업자 5명중 1명, 첫 직장이 1년이하 계약직(종합)”. 2015.1.14.)를 인용한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기사(2015.1.14.)의 제목을 따왔다.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는 이유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확인한다는 차원이며, 보다 구체적인 통계는 다음 소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4) OECD(2013)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OECD(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에서 재인용

5) 고용노동부의 2014년 10월 27일자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기사에서 인용한 OECD의 자료는 1998년과 1999년의 자료로서 최근의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 OECD의 사회통합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토대로 2002년과 2009년 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35.4%,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는 비율을 48.7%, 실업으로 떨어지는 비율을 15.9%로 각각 보고하고 있다. 같은 노동패널자료의 1999년과 2009년 사이 주관적 응답에 의한 각각의 비율을 12.4%, 69.8%, 17.8%로 각각 보고하고 있다.

〈표 2-1〉 ‘현실 속 장그래’ 지표

지표	내용	비고
76.1천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만 15~29세의 청년의 수	경활, 청년부가 2014년 기준
19.5%	이 청년들이 전체 청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비정규직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는 뜻	경활, 청년부가 2014년 기준
34.8%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두야 하거나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의 비중	경활, 청년부가 2014년 기준
62.1%	전체 청년 취업자 중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의 비율. 242만명 수준	경활, 청년부가 2014년 기준
9.0%	청년실업률.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 1999년 이후 최대치 기록	경활, 청년부가 2014년 기준
18.8개월	청년 취업자의 첫 직장 근속기간. 10년 전 2004년은 21.4개월	경활, 청년부가 2014년 기준
47.0%	이직 경험이 있는 청년 중 ‘근로여건 불만족’을 이직 사유로 꼽은 비율. 10년 전에는 39.4%	OECD(2013)
11.1%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	OECD(2013)
69.4%	비정규직이 1년 뒤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	OECD(2013)
19.5%	비정규직이 1년 뒤 실업자가 되는 비율	OECD(2013)

자료: “청년 취업자 5명중 1명, 첫 직장이 1년이하 계약직”(연합뉴스. 2015.1.14.), “‘현실 속 장그래’를 보여주는 10가지 숫자”(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1.14.)

나. 청년관련 세부 지표들

1) 실업률

청년실업률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통계청의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달 대비 1.9%p 증가한 11.1%다. 이는 IMF 직전이던 1997년 7월(11.5%) 이후 최고치다. 15년 7개월 만에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 할 만하다.

2) 비정규직 규모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로부터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50대(22.0%), 40대(21.5%), 60세 이상(19.8%)에 비해 30대(17.2%)와 20

대(17.1%)의 비정규직 비율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3월 대비 증감을 보면 60대, 20대,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노인화와 청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연령대별 비정규직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4. 3					2015. 3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911	100.0	3,401	1,917	2,151	6,012	100.0	101	3,417	16	2,091	175	2,148	-3	
15~19세	141	2.4	44	115	18	141	2.3	-1	50	6	115	0	15	-2	
20~29세	996	16.9	646	349	149	1,031	17.1	35	659	13	421	73	142	-7	
30~39세	1,020	17.2	652	249	294	1,034	17.2	15	658	5	251	1	289	-5	
40~49세	1,336	22.6	721	355	547	1,292	21.5	-44	670	-51	387	32	502	-45	
50~59세	1,295	21.9	657	310	645	1,323	22.0	28	666	9	367	57	654	9	
60세이상	1,123	19.0	680	538	498	1,191	19.8	68	715	35	551	13	546	48	

자료: 통계청,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2015.5.28)

2015년 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분석한 김유선(2015)에 따르면 2015년 8월 비정규직은 868만명으로 임금노동자의 45%에 달한다.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은 20~24세는 71.8%(남), 54.8%(여), 25~29세는 37.2%(남), 33.7%(여), 30~34세는 25.1%(남), 36.7%(여), 35~39세 23.5%(남), 45.0%(여), 40~44세는 25.6%(남), 49.6%(여), 45~49세는 27.7%(남), 56.3%(여)로 24세 미만의 초기 청년기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2015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을 받는 노동자 수는 182만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9.4%로 계산되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ILO, 2003; 김유선, 2015에서 재인용). 청년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5.5%로 전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년의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고령자의 영향률 17.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22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5%를 차지한다. 청년의 경우 이 비율이 27.7%로 역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고령자(25.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동 연구는 청년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정

의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령(19~34세)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5세 미만 청년과 25~34세 연령을 동시에 보면 최저임금 미달비율은 10.9%로 계산된다. 25~34세 대의 미달률이 5.0%로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최저임금 미달률은 초기청년의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약 2.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그 연령대를 넘어서면 전체 평균보다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로 대학생 시기에 알바에 종사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저임금 근로자 비중(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3)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451만2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4.0%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 정도가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2010년 27.5%에 비해서 낮아진 것이지만 OECD 평균 16.3%(2011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했지만 20대 이하의 청년층은 2015년 30.0%로 2010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60세 이상(59.9%)보다는 낮지만 50대(26.9%)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표 2-3〉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단위: %)

구분	2010.3	2011.3	2012.3	2013.3	2014.3	2015.3
전체	27.5	25.5	26.5	25.9	25.4	24.0
15~29세	30.0	27.7	30.3	29.3	29.9	30.0
30대	15.3	13.6	13.2	12.5	11.5	10.5
40대	25.0	21.7	21.7	20.6	19.7	17.2
50대	33.1	31.4	32.2	30.7	29.4	26.9
60세 이상	66.5	65.5	65.9	66.3	63.0	5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3월; 윤정혜(2015)에서 재인용

4) 가계수지(가계동향조사, 2014년)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3.9만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이 증가 폭은 통계 집계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칸 소

비자 물가상승률 1.3%를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이다.

한편,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평균부채는 1,5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5,235만원으로 7% 증가했다. 그런데 40대와 50대는 각각 0.8%, 0.6% 줄어들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는 20대와 30대 청년 가구주의 부채 증가로 추동된다 할 수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올라가니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겠다.

5) 비임금 근로와 자영업(현대경제연구원, 2015. 경찰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비중의 변화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감소율이 가장 큰 것이 특징적이다.

〈표 2-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연령대별 비중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15~29세	4.2	4.5	4.2	4.1	4.2	3.9	3.8	-1.8
30~39세	17.5	16.1	15.1	15.2	13.3	13.5	13.4	-4.4
40~49세	30.8	30.9	30.1	28.9	28.1	27.2	25.6	-3.0
50~59세	25.0	25.8	27.6	28.6	29.8	29.7	30.7	3.5
60세 이상	22.5	22.7	23.0	23.3	24.6	25.6	26.5	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한정수(2015)에서 재인용

아래 표에서 20대 이하의 진입률이 38.4%, 퇴출률이 4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30대도 각각 16.4%와 17.8%로 상위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20, 30대의 청년층은 창업도 왕성하지만, 실패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연도별 자영업자 진입과 퇴출 현황: 2011~2013년

(단위: 천명, %)

구분		2011	2012	2013
20대 이하	진입자	146	129	102(38.4)
	퇴출자	135	142	118(41.9)
30대	진입자	199	185	155(16.4)
	퇴출자	324	154	171(17.8)
40대	진입자	233	205	162(9.0)
	퇴출자	279	228	297(15.3)
50대 이상	진입자	216	208	163(4.0)
	퇴출자	28	64	71(1.8)
합계	진입자	794(11.4)	727(10.2)	582(8.3)
	퇴출자	767(11.0)	587(8.4)	656(9.2)

주: 1. ()안의 수치는 진입자의 경우 진입률, 퇴출자의 경우 퇴출률임.

2. 진입자: 최근 1년간 진입한 자영업자를 추계

3. 퇴출자: 금년 자영업자 - (전년 자영업자+자영업 진입자)

4. 진입률: 자영업 진입자/금년 자영업자×100

5. 퇴출률: 자영업 퇴출자/전년 자영업자×100

6.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계함.
 자료: 김광석,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현안과 과제」 15-04호, 현대경제연구원, 2015. 1. 28.; 한정수 (2015)에서 재인용

다. 청년의 인식

미국의 조사업체 Pew Research사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4개국 48.6천여명의 밀레니얼 세대(18~3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의 인식과 미래에 대한 태도는 우려할 만하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가”에 대해 20%가 그렇다고 응답해 5명 중 4명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22%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배경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는 소위 ‘세습경제’의 그림자가 청년들의 인식에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4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50대 이상 계층(61%)보다 낮은 나라는 4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우리 청년들이 세대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가장 낮게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3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과거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인식되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투자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표 2-6〉 밀레니얼 세대 인식과 태도

(단위: %)

구분	18~34세	50세 이상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가?	20	40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가?	22	43
현재의 자식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것으로 보는가?	43	61
교육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가?	32	-

자료: Pew Research Center, Spring 2014, Global Attitudes survey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20~34세 청년층이 바라는 미래상으로 42%가 ‘붕괴, 새로운 시작’을 꼽은 반면, 23%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절대 선’에 가까운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제성장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의 4분의 1만이 바라는 미래상으로 꼽은 것이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붕괴와 새로운 시작을 지지한다는 조사결과는 다소 의외다. 이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의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아직 식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박종훈, 2015: 280), 한편으로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의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과 연관지어보면 현재와 같은 ‘세습경제’에서는 아무리 ‘노오력’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서울)과 중국(북경, 상해)의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도전과 기회로 가득찬 삶이 바람직하다”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5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의 청년들은 6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LG경제연구원, 2015). 가장 역동적인 대도시에서 사는 가장 역동적인 연령층의 응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 갈등이 심하다”에 대해서 한국 86%, 중국 72%가 그렇다고 응답해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빈부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빈곤층 지원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 한국 10%, 중국 50%로 나타나 한국 청년들이 정부의 빈곤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앞선 두 가지 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인 “부모의 재력이 성공에 중요하다”에 대해서 중국 86%, 한국 81%로 나타나 양국의 청년들은 부의 세대전승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63%, 일본 60%, 프랑스 27%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시사점

높은 청년실업률은 청년빈곤으로 직결된다.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할 시기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소득빈곤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라면 곧바로 빈곤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과연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까? 불행하게도 모두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청년실업률이 높으면 취업을 하는 청년도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론적으로 실업률이 높으면 기업이 구직자에게 괜찮은 임금을 제공할 유인이 없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찾아서 취업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용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조건이라면 실업률이 높은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기업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수요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임금으로 구직자를 유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니트족을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질수록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높은 청년실업률 시대에서 고용을 통한 청년빈곤해소는 생각만큼 쉽지 않게 된다.

실제 청년층의 최저임금 영향률과 최저임금 미달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고령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고, 스스로의 성공(세대내 계층이동)과 자녀세대의 성공(세대간 계층이동)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붕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지지가 큰 것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하겠다.

3. 청년빈곤의 현황과 국제비교

국내에서 청년근로빈곤 관련 추정이 가능한 소득 및 고용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통계청과 관련 연구기관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보원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중 가계동향조사는 월 및 연간 단위의 소득과 지출을 제공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간단위의 소득, 자산 및 부채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그러나 고용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있지 않다. 가계동향조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업자에 대해서는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역시 고용에 대한 정보는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취업자 정도이며, 상용, 임시·일용,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및 무직자가사학생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모두 근로 빈곤 파악을 위한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 분류에 있어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분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고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소득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빈곤추정이 불가능하다.

연구기관들의 작성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교육고용패널 등 패널조사의 경우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와 각종 소득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되기는 하지만 종단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특징상 전국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지표를 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청년근로빈곤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동향조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청년빈곤율과 청년근로빈곤율을 추정해볼 수는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빈곤율과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청년은 19~34세로, 근로는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빈곤선은 중위 가처분소득의 50%로 했다.

〈표 2-7〉 근로관련 빈곤율 변화 추이(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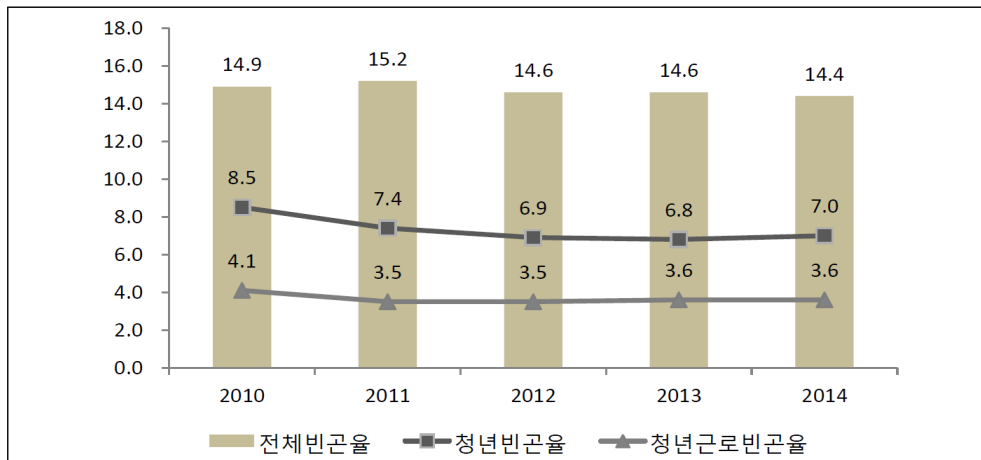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곤율	청년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빈곤선
2010	14.9	8.5	4.1	784,553
2011	15.2	7.4	3.5	832,818
2012	14.6	6.9	3.5	885,589
2013	14.6	6.8	3.6	916,321
2014	14.4	7.0	3.6	939,471

주: 빈곤선은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청년근로빈곤율과 전체 빈곤율 변화추이를 보다 쉽게 비교하기 위해 그림으로 제시했다. 전체 빈곤율은 2011년 15.2%에서 2014년 14.4%로 다소 안정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리고 청년빈곤율은 2010년 8.5%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4년에 조금 반등하여 7.0% 수준이다. 청년근로빈곤율은 이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인데, 2010년 4.1%에서 이듬해 3.5%로 안정된 이후 2014년 3.6%로 조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시계열이 길지 않아서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빈곤율과 청년빈곤율은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 청년근로빈곤율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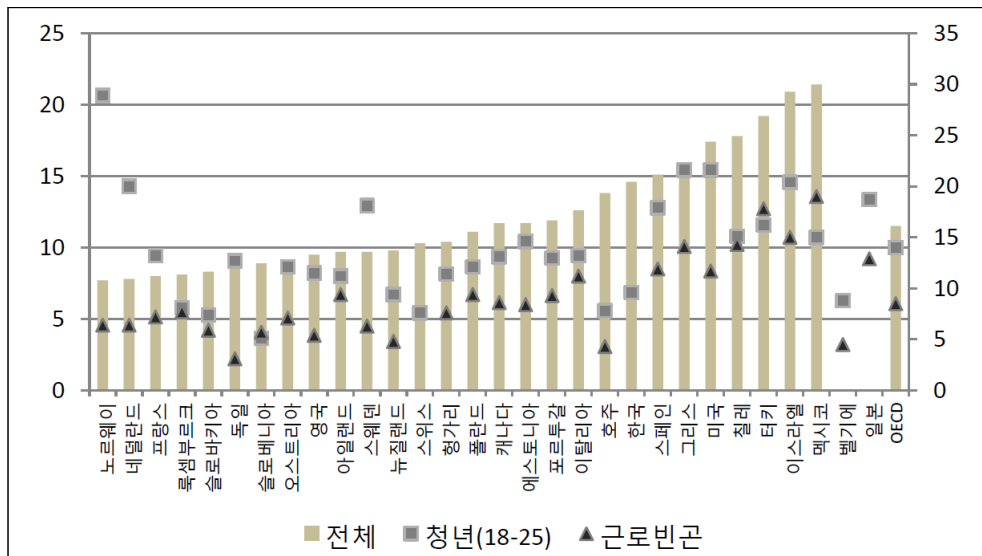
[그림 2-3] 전체빈곤율, 청년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아래 그림은 OECD 34개 국가의 2011년 전체빈곤율, 청년(18~25세) 빈곤율, 그리고 근로빈곤율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빈곤율은 14.6%로 OECD 전체 평균 11.5%에 비해 약 3.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에서 자료가 없는 벨기에와 일본을 제외하면 OECD 32개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8~25세 기준의 청년빈곤율은 우리나라가 9.6%로 OECD 전체 평균 14.0%에 비해서 4.4%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즉, 전체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청년빈곤율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빈곤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서 OECD 국가와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림 2-4] OECD 국가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비교(2011년)



자료: OECD(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청년 근로빈곤 통계와 관련해서 제안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전국 대표성을 가진 공신력 있는 자료인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와 관련한 정보를 결합하게 되면 근로빈곤에 대한 상당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통계청의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지는 하지만 새로운 통계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과거 시계열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청년근로와 관련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선행연구

1. 청년빈곤 관련 연구

지금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실업, 학교-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 문제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빈곤연구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전제되고 아동이나 노인과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이 1차적인 보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년빈곤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김수정(201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아동보다 더 빈곤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로서 교육에서 고용으로 이행이 발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빈곤지위의 세대간 이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빈곤했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landen & Gibbons, 2006; 석상훈, 2007; 이상은, 2008),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 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 홍기석, 2011; 김희삼, 2009; 최은영, 2012). 따라서 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인적자본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생애 초기 실업이나 시간제 고용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노혜진, 2012). 노혜진(2012)은 사건배열분석을 통하여 빈곤가구 자녀와 고소득가구 자녀의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유형화한 결과, 고소득가구 자녀의 경우 청년기에 이미 전문직이나 사무직 정규근로자로의 이행이 고정되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 자녀는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탈, 직업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생애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위와 같이 부모가구의 경제력이 낮음으로써 발생하는 아동빈곤의 특성 뿐 아니라 본인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빈곤의 두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김수정, 2010). 김수정(2010)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18-34세 빈곤층 가구주의 경우 취업을 하더라도 좋지 않은 직업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근로빈곤층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취업을 했더라도 좋은 일자리

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겪게 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는 등 청년들의 근로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변금선(2012)은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정호(2010)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호트 분석을 하였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층일수록 근로소득의 절대적 소득규모가 작고 고용형태간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을 청년기로 보내고 있는 세대들은 소득증가율 둔화와 분배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 노출 위험도 높아진 것이다.

최근에는 근로빈곤의 문제 뿐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청년의 14.7%, 서울 1인 청년의 36%가 주거빈곤⁶⁾ 상태로 나타났다. 즉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4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임대료+냉난방비)는 월 50만원이 넘으며 전체 1인가구 소득의 35%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형편에서 청년들은 자기개발이나 취미, 여가 등의 시간 뿐 아니라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게 된다(권지웅, 이은진, 2013). 최근에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 실업, 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보장, 공공제도, 사회적 관계, 사회심리적 차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청년층의 삶의 형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이성균, 2009).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경제적 자원의 배제, 제도로부터의 배제, 문화적 기회의 배제, 사회적 관계의 배제 등을 포함한다(Fend, 1994). 청년층 중에는 빈곤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공공교육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들은 사회제도로부터 낙오된 집단으로 인식된다(이성균, 2009). 또한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겪게 된다. 사회보험제도는 대부분 취업상태,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지위와 연계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공공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이성균, 2009). 즉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공공복지제도의 배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6) 청년 주거빈곤의 개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청년, 지하 및 옥탑에 사는 청년,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청년을 포함한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는 교육제도의 특성이나 노동시장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고, 청년들의 소득수준도 해당 국가의 임금관련 정책이나 복지제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각종 노동보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취업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고 실업자 등의 생계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이성균, 2009). 따라서 교육, 주거, 노동시장 지위 등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빈곤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청년실업 관련 연구

OECD 주요국가들의 청년빈곤 연구에 따르면 청년빈곤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업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청년기에는 여러 일자리를 경험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직업탐색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타 국가들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2013).

〈표 2-8〉 주요국 청년층(15~24세) 고용률/실업률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OECD 평균
청년층 고용률	25.8	47.6	51.2	46.1	40.3	43.0	58.8	42.6	13.3	17.2	40.1
청년층 실업률	10.0	13.4	16.3	7.8	6.3	19.3	12.7	22.9	52.4	42.7	15.0
15~64세 실업률	3.7	6.3	6.4	5.1	3.8	8.7	7.5	8.1	26.7	12.9	7.5

주: 2014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

유럽의 청년빈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남유럽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과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늦게 집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Parisi, 2008). 따라서 남유럽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늦고 부모의 부양에 의존하면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는 ‘기생 독신(parasite single)’, ‘캥거루족’ 등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북유럽에서는 사회적 권리가 ‘개별화’되거나 북미처럼 개인의 ‘독립’이 강조되는 문화인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이 빠른 특징이 있다(김수정, 2010).

〈표 2-9〉 활동상태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만명)

	2007(A)	2008	2009	2010	2011	2012(B)	B-A
육아 · 가사	50.1	47.6	46.6	43.1	39.7	36.0	-14.1
정규교육기관통학	382.5	391.4	393.9	392.1	390.8	393.4	10.9
학원 통학1)	24.7	26.2	25.0	26.1	24.3	22.1	-2.6
취업 준비	24.4	27.4	25.6	25.9	24.7	26.9	2.5
진학 준비	13.0	11.9	13.9	17.3	16.7	13.8	0.8
쉬었음	24.5	24.9	29.7	27.4	30.9	31.7	7.2
기타2)	13.4	13.0	12.9	13.2	11.8	12.2	-1.2
NEET3)	61.8	64.2	69.2	70.7	72.3	72.4	10.6
합계	532.5	542.3	547.7	545.1	539.0	536.1	3.6

주: 1) 입시학원 및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2) 일시휴직,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 준비 등 포함

3)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등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자료; 나승호 외(2013)에서 발췌, 재구성

위의 〈표 2-8〉을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들에서 청년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바로 실업상태에 이르게 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고,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24세까지의 실업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 역시 마찬가지다. 실업률이 하락하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에 제외된 사람이 늘 어날 경우 고용률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2013). 이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NEET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업의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해 취업이 안 되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규교육기관통학은 2007년보다 2012년에 10만명 증가하였고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으로 구성된 NEET 역시 약 10만명 증가하여 72만 4천명에 이른다.

청년빈곤 연구에 대한 연구와 달리 국내 청년실업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금재호(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첫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자리가 맞지 않는 문제, 둘째로는 임금과 고용이 경직적이어서 신규 채용 기회를 잠식하여 청년실업을 증대시키는 문제, 셋째로는 중견기업의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꼽았다. 현재 20대 청년층 실업자가 전체 실업률의 8.3%나 되

지만 중소기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에 구인활동과 구직활동 간의 불화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장석인, 2010).

이와 같은 문제를 노동시장의 수요적 측면의 문제라고 한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청년층의 노동공급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한정된 대기업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구직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직을 아예 단념하게 된다. 일할 준비를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5~3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5.1%에서 2011년 7.5%로 크게 높아졌다(남재량, 2014). 또한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이 1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첫 취업 평균 근속기간은 1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입직을 하더라도 이후 빈번하게 이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의 입직을 늘리기 위한 인턴제와 같은 제도는 청년 실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남재량, 2006).

3. 한국의 청년빈곤 관련 담론

청년들이 졸업 후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의 지연과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국의 '88만원 세대'라는 말로 상징되는 '빈곤의 청년화'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현 청년세대는 최소한의 사회의식조차 없거나 무능력하다는 부정적 관점, 그리고 청년들을 특정한 '세대'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세대담론이 등장하면서 청년빈곤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수찬(2011)은 주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도시의 빈곤한 청년들을 취재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제 암울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는 가난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에서 사회는 더 이상 가난한 청년들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통계만으로 입증되지 않는 청년들의 문제,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청

년들의 빈곤화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소수가 아닌 다수 청년의 문제라고 보았다. 한편, 박권일(2009)는 청년빈곤의 문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안정노동의 전면화가 특정 세대의 생애주기와 맞물리면서 폐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았다. 우석훈, 박권일(2007)도 현재의 청년문제는 IMF경제위기 이후 10년 동안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급격한 변화의 산물로 보았으며 이러한 흐름들이 특정세대(젊은 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에서 청년세대를 이행기적 세대로 규정하고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 측면에서 청년문제를 조명하고 있으며 개별 청년들의 삶의 이행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은(2014)은 88만원세대⁷⁾ 담론이 청년세대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대상으로 지나치게 추상화시켰기 때문에 개별 청년들의 실제 삶과는 멀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구체적인 환경들과 조건들, 그리고 대안을 향한 시도를 다룬 연구들(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은, 2014; 신윤정 등, 2015; 장홍근, 이정봉, 김선영, 2012)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 황정미(2013)는 연령이 20~35세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고졸 이후 생애경험 및 노동을 연구하였는데, 청년들은 부모의 계층적 배경에 따라 생애경험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가족자원 뿐 아니라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으며 생계를 위해 취업했다가 다시 학력 자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으로 복귀하는 식의 요요(yo-yo) 이행이 많은 사례에서 나타났다.

청년들은 그들의 선택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교육과 고용에 관한 개인적 선택을 해야 한다(김영, 황정미 2013). 그런데 청년은 자신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문화적 지식,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과 성별, 교육, 사회적 출신 배경 및 지역과 연관된 기회 또는 제약에 의해 이루어진다(Woodman, 2010). 따라서 이행기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은, 2014). 또한 청년기 삶에서 필요한 것은 ‘경쟁의 내면화’가 아닌 경쟁에서 벗어나 타자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스스로 사색할

7) 우석훈, 박권일(2007)의 「88만원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에서 88만원세대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수 있는 시간과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은, 2014).

제4절 국내외 정책 사례

1. 국내 정책 사례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여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첫째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2013.10.2.)’로 고용 문제의 주요 원인을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두 번째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12.18.)’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는 가장 최근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인 ‘4·15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4.15.)’으로 내용은 <표 2-10>과 같다.

강세욱(2015)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은 최근 5년간 전체 예산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금까지의 고용률 제고 우선 정책이 시간선택제 또는 인턴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 저임금근로 반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⁸⁾. 반면에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용률 제고 정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강세욱, 2015).

‘4·15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4.15.)’은 교육 및 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청년고용정책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한국일보, “정규직 시간제 3배 늘었지만...정부 공언 ‘양질 일자리’는 줄어”, 2015.1.19.

한겨레, “청년 20만명 고용 추진, 절반이 인턴, 직업훈련”. 2015. 7. 28

9) 김유빈(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5). 「청년 취업·창업 리부팅」을 참조하였다.

〈표 2-10〉 4·15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4.15.)

단계	고용 실태	제도개선 방향
교육 훈련	전공교육과 업무간 괴리	▶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현장과 괴리된 실습	▶ 제대로 갖춰진 기업에서 실습 확대
	교육과 취업 간 연계 부족	▶ 일·학습 병행 활성화(성공모델 확산)
	유연한 직업교육 필요	▶ 스위스식 직업교육 시범도입
	영세 훈련기관 난립	▶ 훈련기관 평가강화 등 규모화
	재직자, 일부 직종 편중	▶ 청년 특화·심화과정 신설
구직 취업	취업정보 부족	▶ 찾아가는 청년 친화적 정보제공(잡 컨서트 등)
	강소기업 이해·정보 부족	▶ 현장감 있는 정보서비스
	청년 취업기회 부족	▶ 스펙조절 채용(채용형 인턴제 확대 등)
	저소득층 취업기회 부족	▶ 저소득층 지원 내실화
	후진학 경로 부족	▶ 후진학 제도 다양화(여건에 따라 선택)
	선호-실제 일자리 미스매치	▶ 양질의 일자리 창출(5대 유망서비스)
	기업 일자리 창출여력 한계	▶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재정·금융 등)
	청년 창업·해외진출 부진	▶ 청년창업의지 고취 및 해외진출 활성화
근속 전직	청년인턴 실효성 미비	▶ 장기근속자 취업지원금 확대
	中소 근속유인 부족	▶ 中소 장기근속자 자산·소득 지원
	中소 근무조건 열악	▶ 中소 근무환경 개선
	군입대 경력단절	▶ 입대前 직무숙련도 유지(맞춤특기병제)
	입대전 기업 복귀 희망	▶ 고용유지 인센티브(군 고용장려금)
	출산·육아 경력단절	▶ 재고용 인센티브

자료: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4.15.)에서 발췌

가.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도는 청년의 조기입직을 촉진하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맞춤식 교육훈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들은 기업으로부터 교육훈련과 함께 임금을 수령하고 정부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2015년 7월 현재 2,93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전승환, 이한별(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의 연간 순편익은 학습근로자 1인당 평균 891만원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참여기업과 학교를 확대하고 고교, 전문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시범 운영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15~34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미취업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해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엔 390만원(65만원씩 6개월 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2009년 제도도입 이래, 인턴제도는 양적지표 확대에만 매진해 정규직 전환이 10% 미만에 불과하는 등 질적 성과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 인턴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해외취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촉진하고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합정보망, K-Move 스쿨, K-Move 멘토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만 34세 이하로 본인, 부모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이 8분위 이하면서 해외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K-Move 스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평균연봉이 2013년 2,018만원에서 2014년 2,741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주로 참여자가 20~30대 청년층인 점에서 청년고용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I, II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I 유형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II 유형은 만 18~34세 청년, 최저 생계비 250%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

내의 단계별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참여자는 생계부담을 덜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수당을 받는데 1단계 상담, 진단 시에는 20~25만원, 2단계 직업훈련 시에는 최대 200~300만원까지 지원받고 훈련참여수당을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는다.

2. 해외정책 사례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OECD 회원국들 및 개발도상국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구조적 장애가 되어 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총 수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전 고용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청년층에게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김문희, 2015). 따라서 청년 실업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노동시장의 첫 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OECD 각료이사회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OECD 청년실천계획(OECD Action Plan for Youth)’을 채택하였다. OECD 청년실천계획(OECD Action Plan for Youth)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장기적인 청년고용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표 2-11〉 OECD 청년실천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현재 청년 실업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요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실업 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지원 • 비용대비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지 및 확대 • 저숙련 청년층 고용에 대한 수요측면의 장애요인(높은 노동비용 등)제거 • 고용주들로 하여금 도제제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속 및 확대 장려
장기 청년고용 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준비 철저(중도 탈락 방지, 노동시장 적합도 높은 기술 연마 등) •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및 효과성 강화(일터를 통한 학습 강화,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을 지원(학교교육 완료 이전에 적절한 현장 경험 기회 제공, 수준 높은 진로 지도 등) •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적 고립을 타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 재설계(정규 및 임시근로자 간의 고용보호 형평성 제고, 취약 청년층을 위한 집중프로그램 운영 등)

자료: OECD(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김을식(2015)에서 재인용

현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의 5가지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총수요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이다. 둘째는 실업 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지원이다. 셋째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유지 및 확대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저숙련 장기실직 청년 채용 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저숙련 청년층 고용에 대한 수요 측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들로 하여금 도제제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김을식, 2015). 주요국의 청년실천계획 이행 상황은 〈표 2-12〉와 같으며 한국은 총수요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직업교육 훈련의 역할 및 효과성 강화,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 지원을 이행 중이다.

〈표 2-12〉 주요국의 OECD 청년실천계획 이행 상황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
1. 총수요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	○		○	○	○	○		
2. 실업 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 지원	○			○					○	○	○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	○	○	○	○		○	○	○	○
4. 저숙련 청년층 고용에 대한 수요측면의 장애요인제거						○	○		○		
5. 도제제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속 및 확대		○	○	○		○	○		○	○	○
6. 교육시스템 강화		○	○	○		○	○		○		○
7.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및 강화	○		○	○		○	○	○	○		○
8.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 지원	○	○	○	○		○	○	○	○		○
9.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적 고립을 타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 재설계			○	○	○		○		○		○

자료: OECD(2014b). Promoting better labour market outcomes for youth; 김을식(2015)에서 재인용

OECD(2014a)가 제시한 우선 지원 청년그룹은 〈표 2-13〉과 같다. 실업 상태이거나 비활동 상태인 NEET족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가 원활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요구와 청년층의 보유 스킬 간의 미스매치가 커질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⁰⁾. 이러한 미스매치는 고용을 낮추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각자가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한국은행(2015)이 발표한 OECD국가의 학력과 노동력의 미스매치 지수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청년층(15~29세)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는 1.75로 OECD 24개국 중 8위로 나타났다.

〈표 2-13〉 OECD의 우선 지원 청년그룹

구분	지원 방안
NEET족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 및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그룹으로 유아 교육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음. 세대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공간 계획 개선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경제개발과 기업 유치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 진입자	학교교육은 마쳤으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수요 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직장 이탈을 줄이고 적절한 승진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진입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음.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대학 졸업자	평상시라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그룹으로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격기준보다 낮은 부문에 취업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이동을 했을 수 있음. 보다 폭넓은 스킬과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대학 졸업자들로 하여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자료: OECD(2014a),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김을식(2015)에서 재인용

나. EU의 청년보장제도(YG: Youth Guarantee)¹¹⁾¹²⁾

2014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15~24세 청년실업률이 40%를 넘어섰으며 교육, 훈련, 고용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15~29세 NEET 청년층이 2013년 기준으로 25%를 상회하는 등 EU 국가들의 높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정책 담당자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는 데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게 되었고, 특히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 중에도 있지 않은 NEET족 청년들을 직업의 세계로 이행시키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했다.

2013년 2월 유럽 이사회는 6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2020년 동안 청년고용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NEET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유럽의 YG 프로그램에 재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유럽의 청년고용증진 프로그램 중 2013년 설립된 최근의 YG제도는 25세¹³⁾ 이하 모

11) YG 명칭을 지닌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1980년대 이후 청년실업 해소와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다양한 OECD 국가들이 활용해온 제도이다(김문희, 2015).

12) 김문희(2015)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13) EU회원국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집행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데, 당초 EU사업에서는 25세 이하 청년들을

든 청년들에게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4개월 이내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받게 하거나 도제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청년보장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전통적인 실업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업을 예방하거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개입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중도 탈락이나 NEET족이 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를 포함한 해외 청년고용 정책의 특징은 첫째, 학교와 기업에서 고용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기업과 산업이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셋째, 사회적 약자 청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 넷째, 지역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학교, 고용주, 직업훈련기관, 공공 고용 서비스센터 등 이해 관계자들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의 경우 고용주들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민간 부문에 'Intervention Works'라는 제도를 통해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벨기에 플랜더스지방은 IBO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카드 시스템(Sanssi Card)을 이용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주들에게 고용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월 670유로의 임금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주며, 스웨덴의 경우 가장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과 노르웨이는 임금 보조금 지급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홈리스 청년들을 대상으로 숙소와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취약한 청소년들을 아침 일찍부터 가정 방문을 하여 훈련 및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개별 국가에 따라서는 30세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학교 교육 종료 또는 실업상태 후 4개월 이내의 청년만이 아니라 NEET족이나 중도 탈락 학생들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도 있다(김을식, 2015).

다. 해외 청년고용 정책¹⁴⁾

1) 영국의 청년지원제도: 청년뉴딜프로그램

영국은 1998년부터 청년뉴딜프로그램(New Deal for Young People)을 시행하였으며 18~2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청년뉴딜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¹⁵⁾. 프로그램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진입(gateway) → 선택 → 사후관리 단계로, 최장 4개월의 집중적인 직장탐색과 초보적인 기능훈련이 이루어지는 진입단계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4가지 옵션(임금이 보조되는 일자리 근무,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 교육훈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당 20시간씩 26주간 근무하게 된다. 선택(option) 단계를 마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집중적인 심층면담과 지원을 하게 된다.

2) 독일의 듀얼(dual)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청년고용 실적이 양호했던 것은 독일의 이원화된(dual) 직업교육훈련시스템(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역할이 컸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직장에서의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이 병행되는 이원화된 직업교육훈련으로 학생들은 일주일에 3~4일 직장에서 현장실습을, 1~2일은 학교수업을 받는데,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더불어 훈련기업을 찾는 데 애로가 있는 직업학교 학생 및 이민자 또는 저소득층 학생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14) 김을식(2015), 김문희(2014)에서 발췌 및 정리하였음.

15) 당초 12개월을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6개월로 단축하고 청년뉴딜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핀란드의 YG(청년보장제도)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상기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별도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고, YG의 일환으로 고용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핀란드는 2005년 Social Guarantee 제도를 도입하여 YG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13년에는 일자리 보장과 교육 보장을 통합하여 YG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모든 25세 이하 청년과 30세 이하 졸업자들에게 실업자로 등록된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시보 일, 학업, 워크숍 또는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 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중등 교육, 직업 교육, 도제 교육, 워크숍 또는 다른 형태의 학습 장소나 재활 교육을 보장해 준다. 특히 청년고용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과 더불어 시도 단위에서의 다양한 영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Vantaa 지역에서는 지역 지원 네트워크(PETRA)를 활용하여 17~24세 실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 취업지원서 작성, 재정 문제, 주택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대일 면담, 외부 기관을 연계한 인생 설계, 청년 그룹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노르웨이의 취약계층 청년보장 프로그램

노르웨이의 소도시 Tvedestrand 지역에서는 15명으로 구성된 공공서비스센터인 NAV가 있는데, 그 중 2명의 직원이 60명의 청년 구직자들을 일대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숙련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석유 관련 사업 외에는 일자리가 없는 편인데, 청년 구직자들은 NAV에 등록하면 사회보장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 및 고용 지원 서비스 등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명의 직원이 필요할 경우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제 3 장

청년근로빈곤의 규모와 실태

제1절 청년빈곤 및 근로빈곤 개념

제2절 청년근로빈곤 바로보기

제3절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3

청년근로빈곤의 규모와 실태 <<

제1절 청년빈곤 및 근로빈곤 개념

1. 청년빈곤의 문제

청년기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노동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 주체로의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독립의 시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과거에는 젊었을 때 고생해서 훗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었고, 이에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력과 고생의 대가가 예전과 같이 비례하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교육에서조차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되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청년층 내부에서도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고용과 맞물리면서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중년이 되고, 가난한 중년이 다시 가난한 노인이 되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 문제의 심화는 청년들이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 과업을 포기하게 만들으로써 인구 재생산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내수침체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가계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년빈곤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방지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빈곤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계층으로서 청년층의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고, 빈곤문제로 인한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청년층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빈곤정책이 주로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과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가구단위를 수혜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고 1인가구가 많은 청년층은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청년빈곤이란 용어에서 ‘빈곤’이란, 우리가 빈곤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야말로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한 상태인 절대빈곤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 당시 영국 구빈원의 미성년자들이 50~100명씩 떼 지어 공장으로 이송되고, 공장에서 몇 해씩 감금되어 육체적으로 혹사당하는 그런 청년들은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빈곤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빈곤이 어디까지나 현 시기 국민경제의 질적 특성과 양적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빈곤이라는 용어 속의 빈곤은 산업혁명 당시 영국 구빈원의 아동, 아프리카 최빈국에서 나타나는 빈곤현상과는 다르다. 빈곤이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또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새롭게 나타나는 빈곤에 대한 개념과 기준 또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과거의 빈곤이 단순히 자원이 결핍되어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했다면, 현재의 빈곤의 원인은 훨씬 다양해졌다. 단순한 자원의 결핍뿐만 아니라, 자원의 결핍을 유발하는 환경, 사회적 구조, 빈곤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사회체계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빈곤의 청년화’는 이미 익숙한 용어들로부터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3포, 5포, 7포, N포세대’, 혹은 ‘88만원 세대’라는 말로 상징되는 청년빈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이탈리아, OECD 가입국의 대다수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대체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나라들에서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동의 비정규화 속도가 빠르고 공공복지보다 사적복지에 의존해왔던 나라일수록 빈곤의 청년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권일, 2009). 그러나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으며, 경제의 정보화 및 금융화가 빈곤의 청년화를 직접 초래한 원인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례로 제조업 중심의 이른바 구 산업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일본과 한국에서 빈곤의 청년화가 어느 나라보다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가 있음을 시사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안정노동의 전면화가 일국 노동자의 생애주기와 맞물리면서 특정세대에 그 폐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빈곤의 구조인 것이다.

2.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

국내에서 근로빈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당시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불안정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근로빈곤(Working Po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왜 일을 해도 빈곤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근로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근로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등 근로빈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표 3-1〉 각 나라(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기관/자료	노동에 대한 정의	빈곤에 대한 정의
EU	- Eurostat	- 주당 15시간 이상 취업자 - 연간 7월 이상 취업자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프랑스	- 통계청(INSEE) - 일반 연구자 -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간 6월 이상 취업/구직자 - 연간 6월 이상 취업 - 연간 1월 이상 취업 경험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때로 60~70%) (상대소득빈곤)
벨기에	-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간 6월 이상 취업/구직자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스위스	- 연방통계청 - 일반 연구자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 경활인구 - 전일제 근로자 - 주당 40시간 이상 영리활동자	- 행정적 빈곤선
미국	- 통계국(CB)	- 가구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1,750시간(44주) 이상	- 연방빈곤선(FPL) (절대빈곤선) - 연방 빈곤선의 125~150% - 200% 미만 (절대소득빈곤)
	- 노동통계국(BLS)	- 연간 6월(27주) 이상 취업/구직자	
	- 일반 연구자	- 연간 1000시간 이상 일한 성인 - 통계청/노동통계청 기준	
호주	- 사회정책연구센터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 경활인구	- Henderson 절대빈곤선 (절대소득빈곤)
캐나다	- 복지평의회(NCW)	- 임금이나 자영소득이 총 가구소득의 50% 이상	- 통계청의 저소득기준선 (절대소득빈곤)
	- 사회발전위원회(CCSO)	- 연간 49주 이상 전일제 (30시간 이상) 또는 시간제로 일한 성인	- CCSO의 상대적 저소득기준선 (상대소득빈곤)
	- 정책연구네트워크(CPRN)	- 연간 12개월 전일제 근로자	- 상대저소득기준선: 연간 2만불 미만(상대소득빈곤)

자료: 김문길, 김태완, 박신영, 이병희, 임병인, 이서현 (2011, p. 159),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근로빈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다. EU의 경우 근로빈곤층을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지난 1년간 주된 경제활동상태(임금, 비임금, 실업자, 퇴직자,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OECD의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빈곤선 이하 취업자로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미국과 캐나다는 개인 소득이 절대빈곤수준과 비교하여 그 이하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지난 27주간 노동시장(구직활동, 일을 한 경우)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으로는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 혹은 ‘임금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킬 수 없는 모든 근로자’, ‘현재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 등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근로빈곤은 가구 단위의 ‘빈곤’과 개인 단위의 ‘근로’라는 두 가지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 연구들은 근로빈곤을 정의함에 있어 취업자가 있는 빈곤한 가구로 근로빈곤을 정의하여 가구 단위로 접근하거나(금재호, 2005; 이병희, 2010; 윤희숙, 2011) 개인을 단위로 근로빈곤을 정의하고 있다(노대명, 황덕순, 유진영, 이은혜, 원일, 2007; 이병희, 반정호, 2009; 홍경준, 2009). 이처럼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근로와 관련된 정의로부터 근로능력 빈곤층까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근로연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및 경제활동기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정의한다. 네 가지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광의의 차원에서의 근로빈곤 정의는 근로연령 빈곤층(working-aged poor)을 규정하는 것이다. 가구주가 근로연령(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는 외국과의 비교를 하거나 혹은 자료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판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근로연령에 따른 빈곤층 구분은 산출방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외국과의 빈곤율 및 근로빈곤층 규모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연령에 해당되어도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둘째, 근로능력 유무 즉, 취업가능성에 따라서 근로빈곤층을 구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능력자가 1인 이상 포함된 빈곤가구의 전체 구성원을 지칭하며, 협의로는 해당 빈곤층 중 근로능력자(workable)¹⁶⁾를 지칭한다(이병희, 2012). 이 개념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선진국에서 공공

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노동시장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이다. 근로빈곤층을 노동시장을 드나들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개념정의를 할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일을 통해’ 경제사회적 자립이 가능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능력빈곤층이 실질적인 지원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빈곤층이 가진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이들이 매우 유동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근로빈곤층은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들면서 경제활동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 취업과 미취업상태를 반복하므로 근로능력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아동 양육이나 노인 부양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능력자로 간주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을 지나치게 확대 파악하고 있으며, 근로연계복지라는 특정한 정책적 지향에 편향된 정의라는 비판을 받는다(홍경준, 2005). 한편 근로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은 조작적으로 근로능력 빈곤층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노대명 등(2007)은 장애나 만성질환이 없는 18~64세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근로능력자를 정의하였다. 또한 이병희, 반정호(2009)는 15세 미만의 아동,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 재학 중, 군복무 중, 중증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분류하였다.

셋째, 특정 시점 혹은 경제활동기간을 고려하여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노대명, 황덕순, 유진영, 이은혜, 원일(2007)은 특정한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빈곤층을 경활빈곤층(active poor)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근로빈곤층이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노동유연성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며,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취업자는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응답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이병희, 2009). 다음으로 경제활동기간을 고려하여 근로빈곤층을 정의한 홍경준(2005)은 ‘6개월간 경활 빈곤층’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근로능력과 경제활동 기간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빈곤가구의 근로능력을 가진 가구원 중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

16) 근로능력자란, 18~64세 사이의 인구집단 중중장애나 만성질환이 없고, 학업이나 군복무 등에 종사하지 않는 집단, 즉 취업이 가능한 집단을 지칭한다.

거나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한 자로 근로빈곤을 정의하였다. 한편, 노대명, 황덕순, 유진영, 이은혜, 원일(2007)의 연구에서는 빈곤가구 구성원 중 지난 1년간 취업기간이 7개월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유럽연합 통계청의 정의와 동일하며,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병희(2010)는 프랑스 통계청의 근로빈곤 정의 기준을 차용하여 근로능력 빈곤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여부로 '취업경험 빈곤층'을 정의하였다. 이는 경제활동기간을 고려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취업경험 빈곤층을 '내내 취업빈곤층'과 '부분 취업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외에 강신욱, 노대명, 신호성, 현영진(2008, p. 24)는 기존 연구와 다소 다른 형태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고 있다. 과거·현재·미래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상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층, 현재 노동시장 참여 상황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취업·실직 빈곤층, 건강상태와 가구여건상 근로 가능한 경우로 근로가능빈곤층 및 근로연령 빈곤층을 정의하였다.

〈표 3-2〉 국내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연구자	노동에 대한 정의	빈곤에 대한 정의
노대명(2007)	-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취업빈곤층 - 경제활동빈곤층으로 6개월의 근로 및 구직기간 초과자 - 경제활동빈곤층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상대소득빈곤)
홍경준(2005)	- 근로능력 빈곤층(15세 이상 가구원중 연로, 퇴직으로 응답한 65세 이상과 심신장애인 제외) - 15세 이상 가구원중 취업자(취업빈곤층) - 연간 6개월 이상 경제활동빈곤층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때로 60~70%) (상대소득빈곤)
강신욱(2008)	과거 중심적 개념: 6개월 이상 취업·구직활동을 한 사람(일반빈곤층, 근로빈곤층) 현재 중심적 개념: 조사시점 취업을 했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경제활동·취업·실직 빈곤층) 미래 중심적 개념: 건강상태나 가구여건상 근로가능한 사람(근로가능빈곤층, 근로연령빈곤층)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이병희·반정호 (2009)	- 15세 이상 가구원중 취업자(취업빈곤층: 중고생,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 재학 중, 군복무 중, 중증장애인 제외)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이병희(2010)	- 근로연령 빈곤층(가구주가 근로연령(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상대소득빈곤)

국내 연구자들의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를 보면 노동시장과 관련된 논의는 주지하였듯이 근로연령, 근로능력, 경제활동상태 및 참여 기간을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연령은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기준인 15세 이상으로 보는 것과 하한 연령과 같이 상한연령을 설정하여 상한연령을 65세 미만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 65세 이상 현세대 노령층은 근로빈곤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연령에 해당되어도 근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최고 수준이며, 다른 국가와 달리 공적연금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하한 연령과 달리 상한연령을 두는 것은 근로빈곤을 과소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근로빈곤을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기준으로 정의할 경우 취업빈곤층, 경제활동빈곤층, 실업빈곤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연령인 15세 이상의 전체 연령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경제활동 상태별로 근로빈곤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인구 중에서 가구 형태(비자발적 실업,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있어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등)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일부 계층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가 있다.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을 정의하는 경우 근로연령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의 명확한 특성을 보여주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궁극적으로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와 분석은 정책목표, 분석자료 및 분석틀에 따라 개별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빈곤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소득빈곤 보다는 노동시장 지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분석해 온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청년근로빈곤 바로보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별로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는 정의형태와 추정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와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나 연구자 등의 합의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기

도 한다(이덕로, 노대명, 이지호, 2014, p. 184). 또한 근로빈곤을 정의함에 있어 연구자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빈곤과 빈곤선에 대한 정의이다. 근로빈곤의 개념과 정의는 노동과 빈곤에 대한 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빈곤에 있어 노동시장 참여 부문이 세분화 되어 있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빈곤에 대한 정의는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빈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위소득의 50, 60%라는 기준선을 활용하고 있다. 즉, 기존 연구자들은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하여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빈곤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다차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을 들 수 있다. 두 주제는 화폐중심의 빈곤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다양한 문제와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 속에서 출발한다. 과도한 화폐적 의미의 빈곤보다는 비화폐적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측정함으로써 빈곤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보면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근로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정의는 대부분 화폐적 접근의 빈곤정의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근로형태를 포함함으로써 빈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단순 근로빈곤이라는 수치로 산출할 경우 청년근로빈곤의 규모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지 않으며,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 있다.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18~34세 기준 청년층의 소득 및 근로빈곤을 보면 35~55세 중장년층의 빈곤규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화폐적 기준에 의해서 청년층의 빈곤과 근로빈곤을 측정할 경우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는 청년근로빈곤율은 자칫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 분석은 잦은 취업 실패 끝에 구직을 포기하기에 이른 청년, 니트족,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자 등은 물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제적 의존세대(혹은 무급가족종사자) 등 현세대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통계적 현황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밖 청년¹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3-3〉 연령대별 소득빈곤 및 근로빈곤 규모 비교

(단위: %)

중위(가처분)소득 50% 미만		35-55세	18-34세	18-25세	26-34세
소득빈곤율	빈곤	5.9	4.5	5.1	4.0
	비빈곤	94.2	95.5	94.9	96.0
근로빈곤율 (경제활동참가 기준)	빈곤	3.2	2.3	1.8	2.7
	비빈곤	96.8	97.7	98.2	97.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9차(2013년 기준), 원자료

청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는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실업과 불안정한 근로형태가 지적되고, 이는 낮은 임금소득으로 연결되며, 생활측면에서는 불안정한 주거문제, 취업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불확실한 미래 비전 등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청년세대의 빈곤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측면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빈곤의 개념보다는 확대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요구된다. 즉 사회적 배제, 다차원적 빈곤과 같이 확대된 빈곤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처럼 청년근로빈곤은 다차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노동시장 지위만으로 빈곤상태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청년정책 입안에 있어서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년빈곤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청년근로빈곤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첫 번째 특징은 다차원성이다. 빈곤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빈곤은 모호한, 여러 요소들의 작용

17) “사회밖 청년”이란 청년 NEET, 불안정 노동 취업인구(비정규직·아르바이트), 교육기관에 통학하고 있지만 취업을 위해 졸업을 늦추고 있는 대학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정준영, 2015). 하지만 인간은 사회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사회속에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경우, 연구자가 정의하고 있는 대학생 역시 학교라는 울타리 즉 교육사회속에서 취업만을 뒤로 미룬 상태라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밖이라기 보다는 정부와 기존 세대의 관심밖 혹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 사각지대’의 청년으로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즉, 빈곤은 우리가 djeig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들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빈곤을 정의할 때 불충분한 자원과 같은 요소들이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Ringen, 1988). 또한 빈곤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으로 박탈(deprivation)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박탈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박탈과 함께 빈곤을 보다 폭넓게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차원적 빈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빈곤은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배제는 수많은 영역들로 확산된,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용된 생활유형으로부터 빈곤층을 거리를 두어 구분함으로써 빈곤층이 그들 스스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Vranken, 2002; Atkinson, 2003: p. 355 에서 재인용). 비슷하게 Hagenanaars와 Vos(1988)는 빈곤에 대한 정의가 다음의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첫째 빈곤은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 둘째, 사회에서 다른 이들보다 덜 가진 것, 셋째, 빈곤은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갖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Moisiu(2004) 또한 빈곤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개념은 이론에서 추출된 여러 개의 하위개념들의 조작화를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빈곤은 일반적으로 '자원부족', '열악한 생활상태', '빈곤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조작화 함으로써 측정되기 때문에 빈곤과 같이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는 현상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우리사회의 빈곤이 경제적 자원의 부족 혹은 결핍뿐만 아니라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과 부족함을 내포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상대적 박탈감 혹은 주관적 빈곤 등과 같은 정서적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정책들은 효용복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후생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어, 각 개인 또는 가구는 자신의 소득을 이용해 필요한 것을 구매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부족을 빈곤으로 간주해왔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과 자산액을 기준으로 공공부조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상대적 빈곤층으로 간주하는 것 모두 소득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다(김경혜, 김준현, 박은철, 2010). 그러나 사람마다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의 양이나 삶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으로도 서로 다른 복지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특히 청년층의 빈곤 또는 복지수준

을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시기로서의 동(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청년기의 분명한 특성은 사회 진입에 있다. 이 단계에 한 사람의 개인은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돌봄의 대상, 보호의 대상에서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적 주체로서의 노동시장을 최초로 마주하게 된다. 청년은 생애 첫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들어서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주택시장의 세입자가 되며, 그 과정에서 자기 명의의 부채를 갖게 된다. 청년기란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이후의 삶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때 형성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이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보다 기회의 균등함과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정준영, 2015).

2. 청년 니트·프리터

청년근로빈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은 노동시장 언저리에 있는 청년들의 상황이다.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현재의 청년들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초국적인 경쟁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실업과 일자리 문제,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정체성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청년 니트와 프리터 관련 연구자들은 이들을 언더클래스 집단(underclass group) 혹은 신 빈곤(new poverty)층이라고 지칭하면서 잠재적 빈곤계층 혹은 새로운 빈곤집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구인회, 2002; 노대명, 2002; 우석훈, 박권일, 2007; 민병희, 2010). 니트족과 프리터족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출연하기 시작하였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무직자를 의미하는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과 같은 시기동안 이와 비슷하게 일할 의사는 있지만 한 가지 직업이나 직장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만 일하고 쉽게 일자리를 떠나는 프리터¹⁸⁾족(Free Arbeiter)의 증가세도 일본사회에서 뚜렷이 목격되었다. 이는 노동자의 ‘비정규화, 파견, 파트 타임 노동의 확대 등을 통한 인건비 축

18) 프리터는 ‘자유롭다’는 의미의 free와 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 arbeit, 그리고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 -er의 합성어인 free-arbeiter라는 일본식 신조어의 약식 명칭이다. 1987년 일본의 대표적인 취업알선업체인 리크루드(recruit)사의 아르바이트 정보지에서 처음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기현, 2004).

소' 등 노동자 상호간 계층적 양극화의 결과물이기도 했다(민병희, 2010). 니트족과 프리터족의 증가는 일본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단면적으로 잘 드러내는 현상으로 한국 사회 내의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니트족과 프리터족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저학력 청년층의 경우에는 고용상태가 더욱 불안하여 실직할 확률이 더 높으며, 다른 청년층에 비해 비정규적인 일(파트타임 또는 임시직)을 갖게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록 고용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현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드러나고 있다(김문희, 2015).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대학 진학률 증대에도 원인이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많은 OECD 국가들의 경우처럼 청년 니트족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OECD, 2011a).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과 니트족 증대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침체 내지 하락을 의미하며, 특히 저학력의 일자리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더욱 치명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청년층은 저임금 기간이나 실업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도 저축이나 다른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경우 실업상태가 길어지면 잠재적인 낙인효과가 커지고 미래의 고용 기회와 임금 수준을 낮추어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청년층의 빈곤 문제와도 직결된다(Carcillo, 2015). 이와 관련하여 OECD는 16세에서 29세 청년니트족의 약 26%가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OECD, 2011b). 더 큰 문제는 이들 계층이 향후 소득, 교육 등에서 배제되고 나아가 새로운 청년빈곤계층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니트족과 프리터족의 증가는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심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니트족은 15~29세 인구 중 취업자와 학생, 주부 등을 제외한 계층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양쪽 모두에 걸쳐 청년니트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조준모, 2009).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시생과 공무원시험 준비생,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큰 특성이 있어 니트족은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지금은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자 등을 포함한다. 니트는 2000년대 이후에 급속히 유행어가 되었는데, 가사를 전담하거나 학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취직도 진학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니트는 일본에서 2000년대 들어와 급증하였고 그 중에서 취업에 희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1997년 8만 명에서 2003년 40만 명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 2008). 프리터는 정사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일구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프리 아르바이트의 준말이다(free arbeiter). 15세~34세 연령 중 재학하지 않는 사람들 중 아르바이트나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가사나 통학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파트 타임 일자리를 희망하는 자로 정의한다. 1970년대부터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의 비정규고용화가 시작되었고, 관리직, 전문직은 여전히 정규고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종이나 사무직에도 비정규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노동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계약, 청부 등의 다양한 고용방식이 진전되는 가운데 프리터는 불안정고용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 2008).

〈표 3-4〉 국내 청년 니트·프리터의 범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정규교육, 기관, 입시학원 통학	육아, 가사,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 준비
취업자	②실업자	③구직단념자	④취업준비자	쉬었음		
①무급가족 종사자				⑤쉬었음 중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자		
한국형 청년니트						
⑥비정규직	②실업자	④취업준비자				
한국형 청년프리터						

① 가무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비임금근로자이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자
 ② 조사기간 1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못했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③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실망실업자)
 ④ 취업 목적의 학원·기관 통학자 및 비통학 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와 달리 당장의 취업 의사는 없음)
 ⑤ 쉬었음(건강악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요양자, 농업종사자 같이 동절기에 쉬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당장의 취업의사는 없어도 장래 취업을 희망하는 자
 ⑥ 정규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규직을 직접 고용관계에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전일제 근로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할 경우, 정규직이 아닌 모두를 통칭. 2002년 노사정합의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자 등)를 포괄

자료: 손훈정(2009). 청년 니트(NEET) 해부-청년니트족 현황과 대책-; 민병희(2010)의 표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제3절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1. 청년근로빈곤 규모

여기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현세대 청년층의 빈곤, 근로빈곤의 현황과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조사되어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패널조사 자료이다. 다른 패널조사와 달리 복지패널은 전국 대표성을 지니도록 표본이 추출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조사항목으로는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주택, 경제활동 참여상태, 복지서비스 관련 사항 등 다양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확장된 근로빈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빈곤과 근로빈곤을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OECD방식(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눔)으로 균등화 소득을 계산한 후, 여기서 산출된 중위가처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연령대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한 소득빈곤의 경우 19~34세는 2007년 이후 빈곤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 2013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⁹⁾. 평균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청년층에서 다소 증가하였지만 장년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점차 소득 빈곤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기존 OECD 연구들을 뒷받침한다(OECD, 2011a). 구체적으로 35~55세 중장년층은 2007년 11.2%에서 2013년 9.8%로 빈곤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년세대에 비해 다소간의 빈곤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빈곤율에만 주목한다면 35~55세 중장년층이 19~34세 청년층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의 경우 2007년에 비해 빈곤율이 감소한 반면, 경제적 독립이 여의치 않은 19~34세 청년집단의 빈곤율은 미약하지만 2007년에 비해 증가하여 빈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표 3-3>과 <표 3-5>의 근로빈곤율 차이는 첫째, 분석연령 차이(18세와 19세), 둘째, 중위소득 산출시 가중치 부여방식에 의한 차이이다. <표 3-3>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복지패널에서 주어진 가구가중치를, <표 3-5>의 경우 개인자료에 가구소득이 포함되어 제공되고 개인 가중치가 별도로 주어진 개인가중치를 활용함에 따른 차이임을 밝혀둔다.

〈표 3-5〉 연령대별 빈곤율 및 연령대별 근로빈곤율 변화

(단위: %)

중위(가처분)소득 50% 미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득빈곤율	19~34세	6.9	6.5	5.6	6.1	6.6	6.0	7.0
	35~55세	11.2	10.6	9.8	8.6	9.3	9.0	9.8
근로빈곤율 (경제활동참가 기준)	19~34세	5.8	5.0	4.0	4.1	3.7	4.1	4.4
	35~55세	9.2	7.7	7.3	6.3	6.3	6.4	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편, 경제활동인구 중 중위가처분소득 50%에 미달하는 근로빈곤율의 경우 청년층은 2007년 5.8%에서 2013년 4.4%로 낮아지고 있다. 35~55세 중장년층 역시 동 기간 9.2%에서 6.8%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존 빈곤 분석방법을 통해 보면 청년세대에 비해 35~55세 중장년층의 빈곤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빈곤율의 감소폭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커서 빈곤감소효과가 중장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비교를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청년(근로)빈곤율을 분석하였다. 근로빈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과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정보는 종사상 지위만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제 한국복지패널과는 청년근로빈곤율 추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소득빈곤의 경우 2013년까지는 35~55세 소득빈곤이 청년 빈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4년 들어서는 청년빈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35~55세에 비해 청년의 빈곤율 감소폭이 적다는 점에서 빈곤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빈곤 측면에서는 복지패널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35~55세의 근로빈곤율이 청년의 근로빈곤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표 3-6〉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청년 빈곤 및 근로빈곤 변화(전가구 기준)

(단위: %)

중위(가처분)소득 50% 미만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득빈곤율	19~34세	8.5	7.4	6.9	6.8	7.0
	35~55세	8.7	8.4	8.1	7.7	6.8
근로빈곤율 (취업자 기준)	19~34세	4.1	3.5	3.5	3.6	3.6
	35~55세	5.5	5.7	5.6	4.8	4.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근로빈곤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한다. 기존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주에 포함된 주부, 학생,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연로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근로빈곤율은 기존 추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빈곤선에 대상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하여 추정한 것이다. 이 경우 청년세대의 근로빈곤율은 2007년 5.9%에서 2013년 5.9%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3-5〉에서 분석한 근로빈곤율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35~55세 중장년층 역시 〈표 3-5〉의 근로빈곤율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청년세대에 비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청년세대의 경우 소득과 노동시장 조건이 개선되는 모습이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본 연구에서 본 청년근로빈곤 변화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근로빈곤율 (경활 및 비경활포함)	19~34세	5.9	5.4	4.9	5.2	5.1	5.3	5.9
	35~55세	9.3	8.0	8.4	7.3	7.8	7.3	7.7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2. 청년근로빈곤 실태

가. 근로빈곤 청년의 특성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근로빈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및 가구주 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가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연령에서 청년세대인 19~34세를 다시 19~25세와 26~34세로 전기청년층, 후기청년층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후기청년층에 비해 전기청년층의 근로빈곤상태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8> 청년근로빈곤 특성(연령별)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근로빈곤율 (경찰 및 비경찰포함)	19~25세	5.7	5.2	6.5	5.0	5.8	7.0	8.5
	26~34세	5.9	5.4	4.2	5.3	4.8	4.5	4.8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청년근로빈곤의 특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과 여성간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측면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근로빈곤율이 다소 높다. 남성의 근로빈곤율은 평균 5.7%, 여성은 평균 5.0%로 남성의 근로빈곤율이 다소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지는 않다.

<표 3-9> 성별 청년근로빈곤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청년근로빈곤율 (경찰 및 비경찰포함)	남성	6.5	5.2	4.9	5.7	5.9	5.2	6.6
	여성	5.3	5.6	4.9	4.7	4.2	5.3	5.2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청년층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 즉 가구주가 되는 것은 이행에 결정적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노동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진입시점이 갈수록 늦춰지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도 점차 늦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한 가정의 부양자가 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현 하더라도 경제적 곤란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의 만혼화, 켄거루족, 니트족 등이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취업, 주거분리, 경제적 독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청년층의 가구주로의 이행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가구주 이행이 어려운 시기에 가구주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가구의 생계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주가 됨에 따라 빈곤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청년세대가 가구주로서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가구주가 근로빈곤상태에 처해있을 때, 빈곤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빈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경우,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뿐만 아니라 복지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근로빈곤 측면에서 청년가구주가 빈곤한 경우는 2007년 6.3%에서 2013년 4.7%로 낮아지고 있다. 비가구주로서 부모 혹은 다른 동거세대에 의존하는 비가구주 청년층의 근로빈곤율은 2013년 기준 6.3%로 가구주인 경우에 비해 높다. 하지만 비가구주인 청년의 경우 단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동거가구원이 있는 반면에 가구주인 청년의 경우 본인이 모든 생계유지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빈곤으로 인한 무게는 더 가중될 것이다.

〈표 3-10〉 가구주 여부별 청년근로빈곤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청년근로빈곤율 (경찰 및 비경찰포함)	가구주	6.3	5.3	4.4	3.6	3.0	5.2	4.7
	비가구주	5.7	5.4	5.1	5.7	5.7	5.3	6.3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청년의 근로빈곤 상황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육수준별로 청년층이 경험하는 근로빈곤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졸 이하의 청년층이 대학 이상의 청년층에 비해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표 3-11〉 교육수준별 청년근로빈곤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청년근로빈곤율 (경찰 및 비경찰포함)	고졸이하	9.7	8.6	8.1	10.1	7.8	9.4	8.7
	대학이상	4.0	4.1	4.0	4.0	4.4	4.2	5.2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청년근로빈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 중 하나로써 기업별 규모에 따른 임금 및 복지격차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층이 사업장 규모가 큰 곳에 근무하는 청년층에 비해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근로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복지패널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위의 가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빈곤 규모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청년이 5~7% 사이인 반면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 내외라는 것으로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사업장규모별 청년근로빈곤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청년근로빈곤율 (경찰 및 비경찰포함)	10인 미만	7.1	6.5	5.1	5.9	4.8	5.8	6.4
	10~50인 미만	5.0	3.1	3.8	2.6	3.4	3.9	3.7
	50~100인 미만	3.2	2.4	6.9	2.2	6.3	5.9	6.4
	100인 이상	0.8	2.6	1.1	1.2	0.6	1.0	0.9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나. 청년근로빈곤의 동태적 변화

여기서는 청년근로빈곤층의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패널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청년들이 빈곤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총 7년의 분석기간 중 빈곤을 경험한 해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을 1년을 경험하면 1회, 2년동안 빈곤하면 2회 등으로 분류하였다. 1회, 2~3회, 4

회 이상으로 구분했다. 빈곤 경험 연도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연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동태분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먼저 청년층 중에서 근로빈곤을 4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13.8%, 2~3회 16.5%, 1회로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경우는 12.4%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중장년층의 빈곤 경험에 비해서는 청년층이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 일정기간 이상을 참여함으로써 시장소득을 통해 탈빈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청년층은 이전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해도 불안정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서 중장년층에 비해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번 이상 근로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의 경험 횟수의 분포를 보면, 7년간 2~3회 경험한 비율이 38.6%로 가장 높고, 4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32.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 번만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29.0%로 나타났다. 중장년층과 비교를 해보면, 중장년층의 경우 4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39.3%로 청년에 비해 높지만, 한 번만 경험한 비율은 34.2%로 청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만 빈곤을 경험한 비율이 청년보다 높다는 것은 빈곤탈출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체적으로 청년의 근로빈곤 탈출률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특성별로 보면 전기 청년층에 비해 후기 청년층이, 성별로는 장기간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남성이, 단기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여성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이, 가구주보다 비가구주가 장기간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장기간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특이할 만하다.

〈표 3-13〉 근로빈곤층 동태변화

(단위: %)

구 분		4회 이상	2~3회	1회	빈곤경험 없음
빈곤동태변화	35~55세	13.1(39.3)	8.8(26.4)	11.4(34.2)	66.7(100.0)
	19~34세	13.8(32.3)	16.5(38.6)	12.4(29.0)	57.3(100.0)

〈표 3-14〉 청년근로빈곤층 동태변화

(단위: %)

19~34세 기준		4회 이상	2~3회	1회	빈곤경험 없음
연령별	19~25세	37.8	53.1	39.7	43.3
	26~34세	62.2	46.9	60.3	56.7
	계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53.1	68.5	47.8	38.2
	여성	46.9	31.5	52.2	61.8
	계	100.0	100.0	100.0	100.0
학력별	고졸이하	29.3	20.0	18.8	16.8
	대학이상	70.7	80.8	81.2	83.2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15.3	8.6	18.6	15.5
	비가구주	84.7	91.4	81.4	84.5
	계	100.0	100.0	100.0	100.0
사업장 규모별	10인 미만	36.2	45.2	39.1	34.6
	10~50인 미만	22.3	15.0	20.1	22.3
	50~100인 미만	9.8	13.0	9.9	7.4
	100인 이상	31.8	26.8	30.9	35.7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3. 주거빈곤을 포함한 개념의 확장

청년근로빈곤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측면에서 소득과 불안정 근로상태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거빈곤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 중에 노동시장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가 청년층의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거빈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최저주거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대비 임대료(RIR: Rent-to-Income Ratio)다. 전자는 실제로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의 물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최저한에 미

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산출할 때 사용된다. 후자는 물리적인 주거환경 이외에 주거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주거빈곤율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최근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주거빈곤율 등의 실태²⁰⁾는 주로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보고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한편, 소득대비 임대료(RIR: Rent-to-Income Ratio)는 주거빈곤율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활용되기 보다 가계지출의 상황을 보여주는 데 주로 활용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근로빈곤층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비율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거빈곤율의 두 가지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소득대비 임대료(RIR)를 동시에 적용해 볼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면적과 환경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별 면적기준과 환경기준으로서 불안정한 주거상황을 보여주는 옥탑방, 지하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최저주거기준 이하로 보고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기준은 월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관련 비용(월세액, 관리비 등)으로 정의하며, RIR이 20% 이상인 경우(김혜승, 2004)를 주거빈곤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RIR 3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박신영, 2012), 본 연구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20%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상황을 보면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 9.5%에서 2013년 8.1%로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청년층을 기준으로 보면 동 기간 9.8%에서 8.9%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었으며, 동 기간 9.4%에서 7.5%로 청년층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²¹⁾.

20) 서울시가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에 조사를 의뢰해서 발표된 서울의 청년(만 19~34세)주거빈곤율은 22.9%(2010년 기준)임. 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지하 및 옥탑, 비닐하우스, 고시원 같은 주택 외의 거처에 주거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1) 진미운(2013)연구에 의하면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보면 2005년 268만가구(16.5%), 2010년 184만 가구(10.6%), 2012년 127.7만가구(7.2%)로 분석되었다(진미운, 2013, p.44).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진미운(2013) 연구는 최저주거기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RIR을 함께 포함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5〉 청년주거빈곤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9.5	9.7	7.8	6.7	9.0	8.5	8.1
19~34세	9.8	9.4	7.8	7.1	9.6	8.0	8.9
35~55세	9.4	9.6	7.8	6.2	8.4	8.6	7.5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2000년대 후반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주거빈곤 상황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청년층의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전체적으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악화와 전세의 월세화 경향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근로빈곤과 주거빈곤 상황을 연계하기 위해 근로빈곤과 주거빈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2007년 14.6%에서 2013년 13.2%로 소폭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층은 동 기간 16.3%에서 13.5%로 청년층에 비해서는 빈곤율 감소폭이 높았다.

〈표 3-16〉 근로빈곤과 주거빈곤 둘 중 하나를 경험한 청년빈곤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거빈곤 또는 근로빈곤 (경활 및 비경활포함)	19~34세	14.6	14.2	11.9	12.4	15.1	12.4	13.2
	35~55세	16.3	15.0	13.7	12.0	14.0	13.8	13.5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이전 표가 주거빈곤과 근로빈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후 분석은 동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들 계층은 이전 대상층에 비해 주거와 근로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거빈곤과 근로빈곤을 함께 경험하는 청년층은 2007년 1.3%에서 2013년 1.6%로 연도별 변화에서 감소

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7〉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한 청년빈곤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거 및 근로빈곤 (경찰 및 비경찰포함)	19~34세	1.3	1.4	1.1	0.9	1.2	1.1	1.6
	35~55세	2.0	2.2	2.2	1.4	2.1	1.7	1.6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청년층이 가진 개별 특성 중 청년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 청년이 가구주이냐 아니냐의 여부이다. 이미 근로빈곤과 확대된 근로빈곤을 가구주 유무기준으로 분석한 것과 같이 여기서도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주거빈곤과 근로빈곤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거빈곤과 근로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년가구주는 2007년 1.4%에서 2013년 2.3%로 0.9%p가 증가하였다. 2011년 0.9%까지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2% 초반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청년으로 비가구주인 경우는 동 기간 1.3%에서 1.5%로 0.2%p가 증가하였다. 가구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청년으로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위기상황 발생에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청년으로 가구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표 3-18〉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한 청년빈곤율(청년 가구주 유무별)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거 및 근로빈곤(A) (경찰 및 비경찰포함)	가구주	1.4	2.1	2.2	1.2	0.9	1.8	2.3
	비가구주	1.3	1.1	0.7	0.9	1.3	0.9	1.5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제 4 장

청년근로빈곤 사례분석

제1절 근로

제2절 빈곤

제3절 인식과 태도

제4절 사회통합

제5절 복지경험과 복지욕구

4

청년근로빈곤 사례분석 <<

본 장에서는 청년근로빈곤 사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례분석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14명의 사례자(이하 연구참여자)를 인터뷰하였다(총 15명 중 적절하지 않은 대상으로 판단한 1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진은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청년단체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일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로 현재 취업자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취업준비자들 중 과거 근로이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포함시켰다. 학업-취업-학업의 '요요이행'의 사례도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의 월 소득은 160만원까지 한정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로 통상의 상대적 빈곤선보다는 다소 높은 선을 선정함으로써 차상위 빈곤계층까지도 포괄하려 했다. 아르바이트만으로 근로 활동을 하는 일명 '프리터 족'은 제외하고, 전업으로 취업한 경우만을 연구참여자에 포함시켰다(대학 졸업예정자 1명은 예외).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는 주로 국민기초보장 수급자들을 추천받았다. 경기충격으로 빈곤으로 떨어진 가정뿐만 아니라 부모세대부터 빈곤했던 가정에서 성장한 빈곤청년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취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켰다. 단, 모든 연구참여자는 과거 근로이력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한정했다. 연구참여자별 상세 정보를 담은 표는 본 장 맨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인터뷰는 몇 가지 틀로 구성된 반구조화 설문지를 이용해서 진행하였다. 본 장은 반구조화 설문지의 구성요소들을 근로, 빈곤, 인식과 태도, 사회통합, 복지경험과 욕구의 5개 절로 재구성해서 배치했다. 근로 부분에서는 현재 근로상황과 과거 근로이력, 그리고 미래 전망을 다루고, 빈곤 부분에서는 빈곤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실태를 다룬다. 나머지 절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로 세부구성을 했다.

제1절 근로

노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한 개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청년들에게 노동은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할 필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들은 이 시기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경제성장 둔화, 일자리와 관련해서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취업난과 비정규직·저임금 고착화 사례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매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발표되는 연말·연초에 어김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자극적으로 방송되는 래퍼토리이다. 위의 기사처럼 실제 청년들의 상당수는 취업했더라도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 질 제고에 있다.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단순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고용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서의 취업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13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청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표 4-1〉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2	12.4	16.3	20.2	19.9	21.2	1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원자료

노동은 생존 그 자체로써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던 근로빈곤 청년들이 현재 다니던 일을 잃게 되었을 때는 생계가 막막해진다. 생존과 직결되는 일을 이들의 의지로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경기악화 혹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사용자의 사업이 악화되어 자발적 실업을 선택한 경우이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지만,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을 나가더라도 바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지만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취업준비생이라는 꼬리표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근로빈곤 청년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3, 4의 경우 현재 근로기간이 한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3은 1년 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 4는 이전 직장에서 재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근무업체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1. 근로조건: 임금

앞서 제2장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이하 청년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달률도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생애임금주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이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비율이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데 비해 청년층에게서만 정체 또는 증가하는 것은 연령대별 임금분포가 더 편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같은 청년층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경영자총연합회가 해마다 임금조정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대졸자 초임을 보면, 금년의 경우 월 290만9천원이다. 전문대 졸업자 초임은 258만4천원, 고졸 사무직은 213만원, 고졸 생산직은 230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결과는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월할 분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전체 대졸자 초임보다 과대평가 되었다 할 수 있다.

과대평가가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만난 연구참여자들의 현실을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들이다. 연구참여자들 중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명이다. 이 중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한 명을 제외하면 이들이 받는 월급은 평균 135만원 정도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자활참여자가 월 80~90만원, 제빵사 자격증을 가진 참여자가 월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연구참여자 중 월급이 가장 많은 참여자가 받는 월급이 세전 160만원이다. 현재 입사 3년차로, 첫 월급은 13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이 업체는 대학생 때 학비조달을 위해서 알바로 일을 했던 업체여서 별다른 직무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연구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 주변의 친구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제가 160만원 벌지만 애들 보면 저보다 더 덜 받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초봉이 보통 130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졸자인데요?) 네, 저도 처음에 뭐 130만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 친구도 공연 쪽인데 개도 저랑 같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개 처음 들어왔을 때 130만원 받았으니까” (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지금 하는 일의 경제적 보상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얘기했어요. 같은 일인데, 너무 힘들다고. 그 정도로 일이 많이 힘들대요. 돈은 또 너무 적다. 왜냐면 월급에서 식비 안 들어가고 차비 없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4, 50(만원)은 그냥 나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25세 여성)

“제 친구들은 대학교까지 다 나와도 한 달에 200만원 받는 친구가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대학 다나오고도 저는 몸을 써서 일해서 150~160만원 받지만 개네는 앉아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가(더 많은가) 한테 더 조금 받고 일했었어요. 130~140만원 받고 사무직 일한대요. 취업해서 사무직 그런거 다니는 것 보다 알바 두탕 뛰는게 돈 더 많이 받는다고. 대학나와도 소용이 없대요.” (연구참여자 13. 23세 여성)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빈곤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수준도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

“솔직히 저는 극한 상황이라 150만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180만원? 200만원이 넘으면 좋죠. 근데 그건 좀 힘드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토익이나 이렇게 있으면... 월 180만원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200만원 넘는 건 안 바래요 아직은 (...) 근로조건은 주 5일이면 되요. 주말만은 제발

(...) 계약직도 괜찮아요. 왜냐면 1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연구참여자 3. 25세 여성)

“연봉이 1800만원이라고 해서 이거라도 받아야지 해서 갔는데 겉으로 드러나는게 1800만원인데 따지고 보니까 1800만원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상여금이나 이런것들을 제외하고 연봉을 잡는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들은 다 잡고서 그것을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앞서 언급했듯이 경총의 자료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같은 학력수준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의 임금이 통계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종사상 지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직장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청년이 5명 중 1명이라는 통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일 경우 저임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취업중인 연구참여자들 대부분 정규직이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만으로 이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년근로빈곤층이 종사하는 업종이다. 업종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숙련정도가 높아지면서 임금이 높아지는 제조업과 달리 숙련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평균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도매 및 소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저임금근로자가 특히 증가했다. 그런데, 이 업종에서는 청년층 이외의 다른 연령층에서도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년층이 이 업종에 계속 종사하더라도 저임금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조업의 기술직이나 서비스업에서도 전문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경력에 따른 프리미엄이 존재하지만, 숙련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업종에서는 경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표 4-2〉 산업별·연령계층별 임금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 증감추이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구분	전체		청년(15~29세)		중년(30~54세)		고령(55세 이상)	
	임금	저임금	임금	저임금	임금	저임금	임금	저임금
전체	402	-155	36	14	93	-201	273	32
농업·임업·어업	-15	-4	-5	1	5	3	-15	-8
광업	-3				-3			
제조업	130	-111	22	-13	76	-96	32	-2
전기, 가스, 증기·수도	17	2	2		2	1	14	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10	-2	-1		5	-4	6	1
건설업	52	13	1	-4		4	51	13
도매 및 소매업	54	26	6	15	31	8	16	3
운수업	-13	-12	-4	1	-18	-13	9	
숙박 및 음식점업	92	18	13	2	30	-8	49	2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8	-1		4	46	-5	2	
금융 및 보험업	-62	-12	-16	2	-51	-11	5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8	10	3	-24	-6	6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4	-2	-3	-2	-1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4	-8	-19	-9	30	-14	43	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7	-20	-18	-1	-19	-6	-21	-12
교육서비스업	33	1	37	-5	-30	-4	26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2	-4	5	5	39	-15	39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1	15	34	16	16	-2	10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6	-17	-29	-1	-36	-24	29	7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7	-29			-9	-8	-28	-20
국제 및 외국기관	5	1			3		3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년 3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실제 연구진이 만난 연구참여자들 대부분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과거 일자리 또한 주로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다.

〈표 4-3〉 연구참여자의 현재, 과거 고용형태와 업종

나이	성	학력	현재		과거	
			고용형태	업종	고용형태	업종
25	여	전문대 재학	학생		임시직 상용직	제조업 서비스업
24	남	고졸(검정고시)	지역고용프로그램 참여		상용직	서비스업
25	여	지방 4년제 대졸	간접고용	서비스업		
27	여	수도권 4년제 대졸	상용직	서비스업		
27	남	서울 4년제 대졸(예정)	학생		일용직 (아르바이트)	서비스업 (편의점)
25	여	지방 4년제 대졸	임시직	서비스업		
25	여	고졸	자활	서비스업		
27	남	전문대졸	취성패		상용직	서비스업
19	여	고졸	상용직	숙박 및 음식점업		
31	남	수도권 4년제 대졸	상용직	NGO		
32	남	중졸(검정고시)	취성패		일용직	건설업
30	남	고졸	취성패		임시직	숙박 및 음식점업
23	여	중졸	취성패		상용직	서비스업
32	남	서울 4년제 대졸	없음		도소매업/ 상용직	

“(경력에 따라 기술이 축적되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대행사에서 경력은 대리급인데 이거를 다른 데 가서 대리급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못하겠는 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조든 설계든 뭐가 1차 가공직이나 기술직들은 내가 이쪽에서 근무했습니다하면 이 경력에 대해서 연봉을 쳐줘요” (연구참여자 8. 27세 남성)

“그냥 일단은 제가 이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과장(의) 월급이 저랑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실제 연구참여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대체로 서비스업이고,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한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업체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가 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계약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시 종업원 규모가 10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 연구참여자는 자격증(제빵사)을 가지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에 속한 제과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초과근로수당 포함해서 월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2. 근로조건: 근로시간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단순노동,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 등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직업은 지속적인 소득의 보장이 없고 항상 경제적인 염려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되었다. 청년근로빈곤 사례참여자의 대부분은 고용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제가 했던 그 일들은 둘 다 휴가는 없었어요. 일 자체가 주간 이틀하면 야간 이틀 휴무이틀 주간 삼일 야간삼일 휴무 삼일 이렇게 했어요. 복리후생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다른데서 일하면 뭐 200중반은 받는데 그 정도 일하면 월급을 얼마 못 받으니까 그만두시는 거 같더라고요”(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연구참여자들에게는 하루하루 닥치는대로, 급한대로 그리고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낮과 밤, 주말에도 근로가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월급의 액수가 크지 않은데, 너무 끝나는 시간이 불규칙하다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그냥 퇴 주더라도 끝난 뒤에 제가 뭐 파트 타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준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이 저한테 맞는가라는 회의감이 든 것 같아요. 어쨌든 알바, 정직원이 된 거는, 사대 보험이 된 거는 일 년이 좀 넘었지만 알바를 하면서부터, 인턴 때부터 한 지는 삼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직을 고민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문제가 생가고 저도 집세도 당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고, 다른데 어쨌든 정확한 직장도 생길 때까지는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연구참여자 8. 27세 남성)

업무의 특성상 야근이 잦거나, 부족한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야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시간에 대한 자기통제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직업훈련을 받을 시간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시간이 아무래도 이벤트쪽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있지는 않아요. 아홉시 반에 출근을 해서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아요. (아까 야근이 많다고) 여섯시에서 여덟시 사이에 끝나시잖아요 직장인들이, 그러면 거기까지 오면 아홉시,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벤트를 하시는 분이 보통 열시에 많이 시작하세요. 열시에 시작하면 열두시에 끝나니까 차가 끊기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3. 근로조건: 복리후생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이 단순노동에 종사하거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시장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은 잦은 이직과 단기취업 등 경제적으로나 근로 환경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함에 따라 부당한 처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낮은 임금, 복리후생 미흡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빈곤한 청년들에게 노동은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가 생기면 노동조건을 고려하기 전에 소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빈곤

한 청년들은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겨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무릅써야 한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야간근로로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된 야간근로로 인해 휴무일은 잠만 자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이미 용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끼니를 제 때 챙겨먹기도 쉽지 않다. 일이 고돼도 점심시간은 보장받는 직장인이 부럽다. 일가족이나 친구와 시간 보내는 일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여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고된 근로방식으로 인해 ‘삶의 질’이라는 말은 근로빈곤 청년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법 하다.

“복지도 없고,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그니까 ”주말에 갑자기 연락해도 나올 수 있죠?“가 처음 질문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연구참여자 3. 25세 여성)

“제가 했던 그 일들은 둘 다 휴가는 없었어요. 일 자체가 주간 이틀하면 야간 이틀 휴무이틀 주간 삼일 야간삼일 휴무 삼일 이렇게 했어요. 복리후생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다른데서 일하면 뭐 200중반은 받는데 그 정도 일하면 월급을 얼마 못 받으니까 그만두시는 거 같더라고요”(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공장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뭐 여유시간이 없고 서비스직 주야로 일주일은 주간, 일주일은 야간(맞교대로) 네. 공장은 그렇고 조선소는 주간만 하다가 야간하면 야간 수당주긴 하는데 쉬는 날 너무 고돼서 어디 나갈 생각, 엄두를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직하는 친구는 그나마 노동은 안하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기는 하는데 그 친구들은 술먹다보면 늦으니까 지각하는 경우도 있고”(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청년유니온의 ‘2013년 미용업계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네일숍이나 미용실은 저학력 여성들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의 대표적인 일자리다. 동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매장 직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64.9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의 1.5배를 초과한다. 그리고 평균 시급은 2,971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4,860원에 크게 못 미친다(한겨레21, 2015.10.19. 제1082호). 주로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점심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없어 규칙적인 식사도 불가능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미용실에서) 일하면 제일 식사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식사 제 때 못 챙겨먹고 위장병 달고 살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네일도 마찬가지로요. 네일도 손님 모일 땐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관절이 안아픈데가 없다고.” (연구참여자 13. 23세 여성)

4. 일과 학업의 반복 이행: 요요이행

대졸자의 노동시장의 지위가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고졸자의 경우는 어떨까? 앞서 저학력자로서 이미용업계에 종사했던 연구참여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임금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데다가 대졸자와의 차별까지도 견뎌야 한다. 학력이 근로조건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력 수준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같은 고용의 안정성이 높고, 복리후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소득단절을 무릅쓰고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연구참여자는 지역의 이름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몇 차례 이직을 경험하면서 고등학교 학력으로 본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지위에 이를 수 없겠다는 판단에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다.

“그 전에는 선박회사 그 다음에 항만회사, 그 다음에 관세사 이런 무역업 쪽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한테 맞는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데는) 비정규직이고요. 2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인데 저는 거기에 있다는 것 보다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연구참여자 1. 25세 여성)

사실 가구에서 소득원이 본인인 경우, 가구규모를 막론하고 진학을 위한 퇴사는 생계비의 상실을 의미한다. 다른 소득원이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빈곤가구의 경우도 사

실상 마찬가지로 상황이 된다. 사실 위 연구참여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절을 시도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와 형제가 없는 단신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버티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상위나 차차상위 가구의 청년들은 이 같은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울며겨자먹기로 버틸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요요이행을 한 청년은 대학을 마치면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대졸자라 하더라도 상황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업종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이 따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연구참여자는 상당한 자기확신과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 자신의 실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자리가 없고 그렇게 할 거면 연줄이 필요해요. (...)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우리나라 항만공사에 취직할거면 3천만 원을 주면 취직이 가능해요. (웃음) 아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연구참여자 1. 25세 여성)

노동시장에서 학교로 이행하는 사례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도 요요이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기존 일자리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전망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망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통역사 양성과정으로 해서 모집을 했어요,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조금, 모집기간이 끝나는 날 알았는데, 이게 선착순모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했

는데 되는 바람에 관광통역안내사 그거 자격증을. 나라에서 국비지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어공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지금 제가 백만 원, 이백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멀리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백만 원, 이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두 달 때문에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연구참여자 3. 25세 여성)

“큰 비전이 안보여서 이쪽 일을 계속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어요. 이것저것 적성검사도 했고, 지금 취업전망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설 계쪽도 좋다고 생각해서 전기랑 기계설비쪽 이쪽으로 생각하다가 기계설비쪽으로 결 정을 해서 9일부터 학원이 시작되고”(연구참여자 8. 27세 남성)

이 같은 역이행의 과정에서 소득공백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의 질 담보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대표되는 청년근로빈곤층은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에 열악한 복리후생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소위 스펙을 필요로 하거나 치열한 경쟁이 수반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연구참여자들은 왜 이처럼 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했을까? 저임금 일자리에 있어서 빈곤한 것일까? 아니면 빈곤하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밖에 선택하지 못했을까? 사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연구참여자들 대부분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거나 다니고 있다. 어찌 보면 평균수준 이상의 학벌을 가진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빈곤’ 그 자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 절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제2절 빈곤

1. 빈곤의 원인과 전승

“빈곤 청년의 생애사를 추적하면 반드시 그들 부모의 빈곤이 있다”(안수찬, 2011). 안수찬(2011)은 부모의 빈곤을 “70·80년대 시골에서 상경했으나 끝내 중산층에 합류하지 못한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임금생활자 대열에서 탈락한 경우, 2000년대 카드대란을 전후해 사업이 망한 경우”로 분류한다. 이를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묶어 보면 애초에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경우와 생애사에서 중요한 시점에 가난하게 된 경우가 될 것이다. 여기서 생애사에서 중요한 시점이라 함은 인적자본 형성의 중요한 시점으로 인지되고 있는 15세 무렵, 그리고 대학진학의 전후 시점을 말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 명을 제외²²⁾하고는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 ‘70·80년대 상경’이나 ‘임금생활자 대열에서 탈락’ 등과 같은 선행연구의 빈곤진입 경로를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밟은 것은 아니지만, 즉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부모의 빈곤 원인은 다르더라도 빈곤 청년의 뒤에는 부모의 빈곤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창시절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연구참여자들이 빈곤으로 진입하게 된 경로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1학년까지 경제적으로 윤택한 환경에 있었다. 그러나 1학년 때 부모님의 사업실패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불행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실패와 동시에 부모님의 건강도 악화되어 이후 본격적인 경제활동은 하지 못하고 일용직 등으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거듭하면서 졸업시기도 동기들보다 많이 늦어졌다. 그 덕에 대기업 취직을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 졸업 후에 대학시절에 아르바이트하던 업체에 공식적으로 취업해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그리고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다른 연구참여자는 중학교 3학년까지 윤택한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이후 부모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었다. 그럼에도 학업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고등

22) 소득이 월 1백만원 남짓으로 빈곤의 범주에 속하지만 소위 명문대를 졸업했고, 부모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편인데, NGO 활동가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소위 자발적 빈곤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학교까지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대형 여행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다. 이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부모의 경제적 곤란이 당사자의 빈곤으로 이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족부양의 책임을 안고 있어 졸업 후 비교적 구하기 쉬운 일자리에 취업해 근로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다. 따라서 현재 불안정 고용(간접고용, 저임금) 상태에서 안정적 고용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어학성적을 준비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앞선 연구참여자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 즉,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빈곤(불안정 일자리)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없고, 오히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만한 여유를 가지기 어렵고, 현재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님이 IMF 시기에 폐업하면서 빈곤으로 떨어진 경우다. 그런데, 폐업 후 계속 상황이 악화하면서 부모님 모두 알콜 중독에 빠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근데 IMF가 역시나 타격이 컸죠. 잘 운영되는 가게를 송두리째 말아먹었어야 했고, 그 이후로는 변변치 않은 가게 자리를 얻을 수 밖에 없었고, 돈도 조금밖에 대출을 못받으니까 더 그제 악순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자는 더 늘고 당장 생활비는 없으니까 또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이자는 더 늘고, 당장 생활비는 없으니까 또 대출받고”(연구 참여자 5. 27세 남성)

갑자기 경제기반이 붕괴된 가정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그리 높은 경우는 없었다.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았고, 중졸 이하의 학력자도 더러 있었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불황기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는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들은 높지 않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요식업, 서비스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그럭저럭 자식들 교육시킬 정도의 여유는 있었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 2004년 카드대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의 경기충격에 큰 타격을 입은 경우들이다. 물론, 고학력자라고 해서 경제충격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경기충격에 따른 피해는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금 단순화시켜보면,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들은 학력수준이 높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업을 선택한다. 그런데 몇 차례의 경제위기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폐업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해도 나이와 경력에서 불리한 이들을 뽑아주는 기업은 없다. 결국 다시 자영업업을 시작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진입하더라도 임시·일용직의 지위를 얻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녀는 빈곤지위를 세습 받는다.

부모의 실직, 폐업, 부도 등의 경제기반 붕괴는 부모의 건강상실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고, 어떤 경우는 이혼에 따른 가정의 붕괴로도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대체로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인지적 능력이나 비인지적 능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의 온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제대로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부모의 이혼 등 가정의 붕괴는 결국 자녀의 교육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낮은 학력수준은 빈곤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다. 부모의 빈곤과 자신의 빈곤이 겹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학진학을 하더라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 당장, 등록금을 대기 위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나 그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알바를 통해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4년만에 졸업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예정자 포함) 연구참여자들 모두 한 학기 이상 휴학을 경험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이 클수록 장시간 알바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수면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패턴이 반복되게 된다.

“(편의점에서 9시간 일하고 나면) 공부하고 이제. 집에서 아니면 도서관가서 공공도서관가서. 그래도 잠은 좀 자려고 하고 있어요. 안그러면 우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몇일 날을 새봤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느끼더라고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졸업을 늦추고 있는 이른바 NG(no graduation)족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일부러 졸업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늦게 한 경우들이다. 생계를 위해 졸업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소위 스펙을 준비해서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잡으려는 생각은 할 수 없고, 열악한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려 하면 그 만큼 등록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졸업을 유예할 수도 없다. 대학원 진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원 진학이나 졸업 유예나 알바나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에는 없는 유형이지만 지방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주거비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라도 출신지역에 따라 이들의 대학생살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학비만 조달하면 되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경우는 주거비까지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아무래도 학업에서 공평한 경쟁을 하기 어렵다. 부모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학생,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하는 대학생, 학비와 주거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공정한 학점경쟁, 취업에 필요한 스펙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자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근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가 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고, 만일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곧바로 다시 자활로 넘어와야 한다.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그런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작년에 일하고 취성패하고 올해 넘어와서 다시 일하려고 하는데 1년 사인데, 1년 사이에 시급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똑같은데. 그러다 보면 괜찮은 알바자리 구하고 있다가 주민센터에서 쉬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 그래서 쉬고 있으면 안되니까 자활사업 참여하라고 해서 한거예요. 여지를 안주잖아요. 유예기간을 별로 안줘요”
(연구참여자 7. 25세 여성)

2. 성장과정과 학교생활

근로빈곤청년들의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전술한 것과 같이 부모의 소득상실, 건강상실,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는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한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한 연구참여자는 이후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계속 갈등을 겪었다. 부모로부터 통상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이 연구참여자는 결국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바로 집을 나왔다. 당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대부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지만, 이 연구참여자는 아직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학교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역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했다. 이 연구참여자는 부모의 이혼이 학업성적 하락과 자퇴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아무래도 든든하게 돌봄을 받지 못한 환경이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관심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별로 신경 안써져 같아요. 아 신경 안쓰게 아니라 제가 그냥 들어가서 잤어요. 처음에는 막 신경써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라 이런식이었던 것 같아요.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23세 여성)

양친이 계시더라도 생활습관병이나 중증 질환을 가진 경우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 부모의 알콜중독으로 인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은 연구참여자도 있다. 알콜중독인 부모님을 감시하느라 밤새 잠을 못자고, 학교에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공부) 안했어요. 학교에서 별명이 ‘포자’였거든요. (...) 잘 수밖에 없는게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요. 술 사리. 그러면 그거 감시해야 되니까 어떻게 자요 못하지”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직장을 선택할 때 근로조건 같은 것을 따질 여유가 없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난 후에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 일자리에서 쌓은 직무능력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필요한 직업역량을 따로 키워야 한다. 그런데, 충분한 스펙을 갖지 못한 취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두 조건을 충족할 만한 환경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 근로빈곤 청년들은 스킬을 요하지 않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경력자’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렵다.

3. 경제상황

가. 가계상황

연구참여자들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실업과 고용의 경계에서 살아왔다.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가족구성원의 수입과 자신의 월급으로 빠듯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가장으로써 경제적인 책임을 무겁게 지고 있었다. 이들이 진출한 일자리는 대체로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써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여도 자금을 모으거나 직업 경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20~30대 초반에 적절한 학력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여 종사한 직업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의 장시간 노동이 요구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고정적인 소득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적자는...솔직히, 대출은 안 하고 있고. 사실은...가끔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이 있어요. 한 달에 한 1, 20만원 있는데, 그걸로 적자를 메우거나. 사실은 지금도 빚이 있어요. 어디 뭐 은행이나 금융적으로 잡히는 빚은 아니고, 제가 약간, 제 충무를 하고 있는데 그 갯돈이 모여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빌려 쓴다는 명목으로 운용을 하고 다시 갚고 이려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0. 31세 남성)

“그니까 제가 90을 받자나요. 거기서 30%가 공제가 되요. 구청에다가 신고가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실비 빼고 소득이 들어가고요. 90만원 남는다고 해도 실비가 빠지면 80얼마 찍히겠죠. 구청에서 그 돈을 30%를 공제를 해요. 90만원이라고 예를 들면 27만원이잖아요. 공제되면요. 27만원 공제된 63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죠. 거기서 4인가구니까 4인 가구에 맞게 돈이 수급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장기입원 중이라서 돈이 빠져요. 구성원이긴 하지만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장기입원 중이니까 돈이 또 빠지고 그렇게 하면 제 월급이랑 수급비 포함하면 150이고요. 4인 가구 돈이죠. 장애수당은 별도로 나오는 거니까 170정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는 평균적으로 45만원 넘는 거 같아요. 오빠 정기검진 같은 거 받을 때는 조금 더 나오구요” (연구참여자 7. 25세 여성)

“제가 9시간 하고 있거든요. 9시간 하는데 31만원 받았어요. 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먼저 제 거 통신비 내고 지금까지 동생이 냈으니까요. 제가 내고요 나머지는”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월급은 80에서 90.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날수마다 돈이 들어오고요. 날수마다 들어와서 월급이 평균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하루에 3만 6천 770원이 고요. 실비 포함해서요. 이제 1주일에 주 5일이잖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안하는데 주차라고 해서 주차수당이 또 나와요. 그건 실비 뺀 3만 3천 700원이에요. 그래서 월급은 날수가 20에서 22일사이면 90만 원 정도 나오구요. 20일 밑이면 80만 원 대예요” (연구참여자 7. 25세 여성)

“그런데, 왜 여기를 처음 하게 되었냐면, 원래 다른 곳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제 회사가 흥대예요. 그런데 교통비 드는 거 생각하고, 제가 야근을 많이 해서 택시타고 오고가야돼서 그런데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게 지원이 안 돼서. 그러다가 여기로 택하게 되었고. 여기가 공과금이 이만원도 안 나와요. 만 이천 원? 만 얼마밖에 안 나와서 그거를 다른데 관리비랑 치면 그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월세가 사십만 원이고 공과금들은, 관리비 조금 더 내는” (연구참여자 6. 25세 여성)

“인턴으로 일 년을 다니다가 거기서 계속 알바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냥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정직원까지는 힘들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는 날 근무해주는걸로 해서 한 달에 60, 그 때 받고, 인턴 때는 100을, 120정도 받았고요. 120, 30 받았고, 알바는 그때 5일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60에서 70정도를 받았고요. 지금은 버는 금액이요? 버는 게 제가 160을 벌고요, 160에 세금을 15만원을 떼가더라고요.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나가고,.. 저, 어머니께서 주세요. 쉽게 말해서 제가 160이 있으면 여기서 140정도로 시작을 하면, 50을 내면 그 나머지에서 부모님 일당 50만원을 드리고요, 나머지 돈으로 사는데 제가 신용카드가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 쓰는 최저한도로 해놓고. 왜냐면 회사 다닐 때 급하게 써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무래도 영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신용으로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저는 거의 안 써요. 점심도 집에서 먹거든요. 회사가 가깝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홍대라서 육천 원에서 팔천원정도가 점심값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20일만 나가도 꽤 되는 돈이라서, 이제 저는 회사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저는 한 시간이니까 갔다 오겠다고 해서 보통은 그 전날 밥을 해 놓고 점심을 먹고, 간단하게 먹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데서 조금 돈을 많이 줄여서 집 식비를, 그렇게 좀 많이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핸드폰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회사에서 아무래도 통화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연구참여자 6. 25세 여성)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평균부채 1,5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고, 30대는 5,235만원으로 7% 증가했다.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올라가니 부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대학을 다녔던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알바로 돈을 벌어 학비를 충당하기도 했지만, 부모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는 생활비도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생활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래 취지는 알바 등으로 학업시간을 뺏기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출인데, 상황에 따라 부모의 병원비를 대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장학재단에서 학부 쪽은 보통 국가장학금을 우선순위로 해주고 그 다음에 든든학자금 쪽이죠. 근데 사실 든든학자금이 제일 좋아요. 이자도 제일 낮고 생활비 지원도

좋고... 이미 올해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150. 네 근데 안 받을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당장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 병원비를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그나마 본인이나 가족의 신용이 있는 경우는 금리가 크게 높지 않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높은 이자부담을 져야 한다.

“진짜 저희로서는 천만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에 아직 어머니 신용이 그나마 남아 있었을 때 대출금 13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그걸로 살아요. 그걸로 살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사실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높다고 해도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자내고 원금 조금 갚고 그러면 거기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그제 어머니가 안보여주세요. 요즘은 안보여주기 시작하신거 보니까 좀 빠듯하신가봐요. 예전에 들었던 건데요. 그때 당시가 거의 한 2억 정도? 근데 그게 몇 몇 빚은 보험 쪽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이자도 유예되거나 아니면 원금 갚는 게 무한정 연기가 가능한. 그니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 시까지다 보니까 만기 시까지만 갚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만기 시에 다 갚으면 되는 거니까 좀 기한이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데도 그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가 11%인가?”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나. 주거환경, 주거비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크게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과 독립해서 사는 청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당연히 부모의 주거환경을 공유할 것이지만, 그나마 좋은 주거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와 동거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좁은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와 동생 둘과 생활하고 있는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주거복지 확대 방향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대신 유도주거기준이 논의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이 최소한의 공간을 설정한 것과 달리, 유도주거기준은 쾌적한 주거를 위해 보장해

야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4인 가구 기준 66㎡가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참여자의 경우 약 30㎡에 4명이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유도주거기준은 물론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평수가 아홉평. 그래서 좁죠 (...) 저희 집이 있으면 이제 많이 조그만 집 가시면 있을텐데 이렇게 있잖아요, 방이 있고 거실 같은 방이 하나 있고 부엌이 있으면, (...) 집에 들어가면 짜증이 많이 나요. 집은 좁고 더운데 막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많아서 짐도 많은데.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서 제 짐도 못 풀었거든요 아직. 실은. 이런걸 보면 답답하니까. 빨리 먹어 이리면서. 막 짜증내고 그런 제 모습이 제일 불만족스러워요.” (연구참여자 3. 25세 여성)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대상 120명)에 따르면 월 평균 주거비가 약 73만6천원으로 조사되어, 평균 거주시간(하루 9시간 49분)을 고려하면 시간당 주거비가 약 2,480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 평균 시급의 약 26.7%에 해당된다. 이 결과는 국토부가 ‘20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20.3%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2012년도 19.8%에서 0.5% 포인트 상승했다. 단순 비교해보면, 청년이 전체 인구에 비해 소득대비 높은 비율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청년 중에서도 빈곤청년의 경우는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모수가 되는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근로빈곤청년들의 주거환경 역시 그리 좋지 않다. 당장 임대료 등 주거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대학 재학시에는 대학생 전세임대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졸업 후 근로활동을 하면서는 그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야근이 잦은 직장 때문에 직장내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쉐어하우스를 선택했는데, 여러 명이 같이 거주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감수한 것은 주거비 부담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관리비 포함 약 50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세후 소득이 145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연구참여자의 경우 RIR은 34.5%로 전국 평균은 물론 민달팽이유니온 조사결과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결국 지역별 임대료 수준이 비슷한 상

황에서 RIR을 결정하는 것은 모수가 되는 임금수준이 될 것이다. 역시 청년근로빈곤층의 RIR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 취업준비

빈곤은 취업 또는 이직을 위한 ‘스펙’ 준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많은 기업들이 과거의 학벌이나 학력 위주의 채용관행에서 벗어나 능력위주의 채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력이나 소위 ‘스펙’은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진정한 능력위주의 채용관행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대기업과 공기업 일부에 대해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이 학력 제한을 두고 있었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자격증과 어학성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고, 수상경력과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경험을 요구하는 곳도 다수였다(연합뉴스, 2015.10.27. “주요 대기업, 신입사원에 너나없이 경력·스펙요구”).

그리고 이 같은 기업들의 채용관행은 취업준비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전경련의 ‘스펙에 대한 기업과 취업준비생의 인식 차’라는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97.5%가 스펙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업의 1.1%만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비된다.

그렇다면 이런 스펙을 쌓는 데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먼저 시간적으로는 공채 준비에는 평균 13.3개월이 소요되고(인크루트), 취업자의 70% 이상이 6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청년위원회, “청년구직자 취업준비 실태 보고서”)되었다. 7학기 이상 수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생의 절반(49.2%)이 스펙을 위한 토익학원, 면접과외, 이미지트레이닝 등의 취업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130만4천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한 학생은 42%에 달했다. 청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사교육에 1인당 월 평균 30만4천원(수도권 32만2천원, 비수도권 29만3천원)을 지출했고, 취업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80~3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청년유니온은 4년제 대학등록금과 해외연수비용, 그리고 취업사교육,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4,2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기도 하다(등록금 1인당 평균 2802만원. 해외연수 1108만원. 취업사교육 112만원. 토익이나 자격증 취득 59만원).

여기에 최근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등 ‘취업 9종 세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외모도 스펙’이라는 신조어와 같이 취업 9종 세트에 성형수술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다양한 스펙 쌓기 경쟁에서 빈곤청년들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최근 ‘부모도 취업 스펙’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의 지위·재산 등 여건이 본인 실력보다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64.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이나 인적 네트워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빈곤청년들은 취업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은 가뜰이나 좁은 청년의 취업문을 더욱 좁게 만든다. 대부분 현대 기업들은 일자리의 15% 미만을 신입직원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Hausmann, 2015). 이것은 기업이 학교 교육이 지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시장의 기술(skill)의 대부분은 학교가 아니라 일자리에서 형성된다는 것과 상통한다. 이 같은 기업의 생리 상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순수한’ 졸업생을 곧바로 채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순수한’ 졸업생은 훈련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들이 훈련비용을 줄이고자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아예 한 번도 취업해보지 못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무경험 2~30대 청년 실업자가 12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8만9천명, 30대의 6천명(총 9만5천명)이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들이다. 취업경험 없는 2~30대 청년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15.1%(20대는 21.1%)를 차지한다. 여기에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그냥 쉬는 20대도 많아지고 있다. 4월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25만명에 달한다. 작년 같은 달 대비 16.3% 증가한 수치다.

제 입장은 그거예요. 기회라도 좀 주고 도전해볼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 다 경력만 뽑으면 저더러 뭐 어떻게 지원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죽하면 워크넷 그 일하시는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신입을 안뽑아서 되실지 모르겠다

고. 자기네들이 신입을 뽑는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진짜 한달에 두 번 받았어요 문자를. 여기 지원해 보시라고 두 번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이처럼 좁은 취업문에,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충족할 만한 경제력과 시간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빈곤청년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일단 열악한 조건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력을 쌓아 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바랄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앞 절에서 밝혔듯이 대체로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이직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하기에는 당장의 소득공백이 우려된다.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게 깔려 있는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였다면 가능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 된다.

그리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한 번 열악한 일자리에 발을 들여 놓으면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회전문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인특성과 무관하게 저임금 경험은 미래 저임금의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상태의존(state dependence)과 저임금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벗어나기 어렵다는 기간종속(duration dependence)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이 같은 회전문 함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제3절 인식과 태도

1. 삶의 만족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2.6%가 현재 삶을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9.7%, 비교적 불안하다 42.9%)고 평가했고, 47.4%가 안정되어 있다(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42.7%, 매우 안정되어 있다 4.7%)고 평가했다. 응

23) 이병희(2010), 석상훈(2008), 반정호(2006), 김혜련(2009); 강세욱(2015)에서 재인용

답자 10명 중 1명(9.7%)은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근로빈곤 청년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물었다. 결과는 2점에서 10점까지 다양했다. 먼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연구참여자는 세 군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장기적인 진로를 위해 전문대학에 재학중이다. 조실부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공모전 상금, 알바 등)과 정부의 지원(기초보장 수급,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지금까지 삶을 잘 꾸려오고 있는 케이스다.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경험과 미래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현재가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참여자는 같은 맥락에서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는 앞선 사례와는 사뭇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위 ‘달관세대’를 연상시킨다.

“죽을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도 저도 별로 나라에서도 도와주니까 살 수는 있잖아요. 비관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걸.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 만족하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크게 욕심 없는데” (연구참여자 7. 25세 여성)

“일단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회사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누가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막 가지고 싶은데 못 사는 것도 없거든요. 그건 다 욕심이라서” (연구참여자 6. 25세 여성)

그 다음은 2점에서 5점의 분포를 보인 불만족 그룹이다. 불만족의 요인은 빈곤에 따른 결핍, 스스로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이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어려운 형편, 보다 나은 직장을 위한 스펙에 필요한 투자 부족, 저축 등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 등은 결핍에 의한 불만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에 나와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게, 동기들이나 애들끼리 만나면 월급은 받을 안 해도 얼마 넣느냐는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청약을 들었느냐, 뭘 했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애들은 무슨 명품백이다, 예를 들어 여자애들은 백이나 명품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가방도 거의 백팩, 대학교때 매던거 계속 들고 다니고 회사도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점점 차이가 나거나 구두나 이런거에 대해서 속상했는데,” (연구 참여자 4. 27세 여성)

현재의 삶이 팍팍하고 빠듯하다보니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불만요인이 된다. 여가의 결핍이라 할 수 있겠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는데 돈을 벌려면 그럴 수가 없고. (...) (야근) 매일은 아닌데 그냥 스케줄을 점장 맘대로 짜니까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 그냥 집에 오면 한 7시 되는데, 끝나고 오니까 밥먹고 씻고 바로 자요. 그냥 거의” (연구참여자 9. 19세 여성)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연구참여자는 만족도에 2점을 주었다. 부모의 빈곤과 질병이 자신과 동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는 이 연구참여자는 도무지 만족할만한 구석을 찾기 어려운 듯 보였다. 그런데, 그나마 2점을 준 것은 그 정도의 만족할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희망의 뭉을 남겨둬야 하는 절박함의 표시였다.

“여기서 제가 놔버리면 다 죽는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2. 현재 가장 큰 고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같은 조사에서 어떤 문제로 가장 불안해하는지를 묻은 결과(복수응답), 61.5%가 ‘고용 및 일자리’를 꼽아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꼽혔다. 다음으로 ‘연애와 결혼(41.7%)’, ‘주거비 부담(27.8%)’, ‘빚 부담(19.3%)’, ‘출산 및 육아’(1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 조사결과는 청년의 소득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청년에게 묻은 결과다. 빈곤

청년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고민은 딱 두 가지로 축약된다. 취업과 돈이다. 취업에 대한 고민은 위 조사결과와 상통한다. 취업문제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연구참여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다. 이들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는 취업이나 이직이 쉽지 않은데, 필요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어학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고민이 되는 이유는 당장 조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스펙 쌓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커다란 기회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금 쉽게 말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돈이 있거나,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로빈곤청년들은 둘 다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다. 자격증과 어학에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자식의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대체로 빈곤가정에는 질병이 따라 붙는다. 질병이 빈곤의 원인이기도 하고, 반대로 빈곤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으로 수술에 큰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일부 적용이 안되는 진료료가 있을 수 있고, 입원을 해야 할 경우 간병비용 등은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치료비 다음으로 돈이 아쉬운 부분이 주거비다. 가족과 함께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환경 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 그런데 독립해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나, 독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장 큰 부담이 된다. 앞서 한 연구참여자의 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34.5%에 달하는 것과 같이 주거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울 중심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기초보장수급자인 한 연구참여자는 지금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의 독립으로 보고 있다. 자활참여자인 이 연구참여자의 가구는 현재 3인 가구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독립하면 부양비를 부담하더라도 지금보다 가구의 총 소득이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장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못되다 보니 나름대로의 빈곤탈출의 '묘책'을 선뜻 실행하기가 어렵다.

3. 미래에 대한 전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2%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희망이 전혀 없다 1.7%, 희망이 없는 편이다 36.5%)고 응답했고, 61.8%는 희망이 있다(희망이 큰 편이다 45.9%, 희망이 크다 1.9%)고 응답했다. 청년문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청년들이 60%는 넘는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청년은 어떻게?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가. 자신의 미래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막대한 기대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상당히 낙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투하며 살아온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요 솔직히 그런 거 생각했으면 학교를 못왔을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발 벗고 제 포트폴리오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라도, 나 좀 후원해주세요 라고 할 각오로 학교를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을거예요, 빚지는 거는 빚지는 거다. 그렇지만 나에게 투자하는 거니까. 나에게 더 채찍질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그 대신에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요. 상환 계획은 솔직하게 말해서 없어요. 그 대신 나 자신에 잘될까라고 저는 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겠죠.” (연구참여자 1. 25세 여성)

연구진은 위 연구참여자들과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학업, 근로, 미래 투자 등에 있어서 상당히 스스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채무는 어떻게든 상환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삶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외부에서의 조그만 충격이 그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균열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참여자는 안전장치 없이 혼자 몸에 의지해서 좁은 평균대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이 경우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우 복지는 완주를 위한 든든한 지지대나, 혹시 균형을 잃어 넘어질 때 안전하게 받아 줄 보호망이 되어줘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위의 사례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참여자를 제외한 미래를 낙관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낙관 포인트는 조금 다르다.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가 반영되기도 한다.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조금은 형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룹과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의 미래를 비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앞으로도 커다란 진전을 바라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다.

“그냥 일단은 제가 이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과장(의) 월급이 저랑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랬고, 두번째는 이제 솔직히 대기업이 아닌 이상 돈을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마지노선의 나이가 스물 일곱? 여자의 나이가. 스물 일곱에서 정말 많아도 스물 여덟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들어간다 치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이 좀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소기업을 간다고, 친다고 해도, 잘 가서 중소기업을 간다고 해도 월 250을 번다쳐도, 그러면 살짝 나아지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해요” (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솔직히 말하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솔직히 월소득이 5,6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보다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전세를 구해서 들어갈까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뭔가 그렇게 막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나. 미래의 자녀세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10년 후 자신 혹은 집안의 형편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낙관하는 편이지만 자녀세대에 대한 전망은 이와 달랐다. 자녀세대가 자신 세대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연구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은 현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일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취업준비생인 경우는 괜찮은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높이를 낮추면 어느 정도 소득활동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자녀세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의 자신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황, 아니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자식의 경우는 이 정도의 조건으로는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겪어온 어려운 과정을 자식에게는 되풀이시키고 싶지 않은 인지상정이 반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4. 결혼과 출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각각 67.5%, 64.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꺼려지는 정도는 결혼이 69.7%, 출산이 74.9%에 달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꺼려지는 정도는 결혼보다 출산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무래도 결혼보다 출산과 육아의 비용이 더욱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직장, 결혼자금, 주택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집이랑 결혼할 자금이랑 그니까 제 직장이요. 저는 안정적이고 만약에 애를 낳으면 애를 낳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력도 필요하고 그런 직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자금 2천만원)은 못 모을꺼 같아요.” (연구참여자 6. 25세 여성)

“회사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2~3년은 있어야 회사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모아 놓은 돈이 없어도. 그럴 때 하고 싶지. 불안한 상태에서 내가 가정 때문에 다시 포기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이걸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8. 27세 남성)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데는 돈이 든다. 당장 이성교제가 어려우니 결혼생각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을 생각하면 결혼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된다.

“집안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데이트비도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안될 것 같아요. 해서 그 친구도 집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 저는 결혼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 연애고 뭐고 지금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당장 속된말로 쫓겨나기 직전이니깐 (...) 백만원만 벌리면 상대방만 괜찮으면 결혼하겠죠. (...) 집을 나와 살더라도 월세로 살아야 될거고 뭐 그렇게 좋은 집은 못살겠죠. 백만원이니깐.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안된다고 하면 뭐”(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특히, 여성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배우자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성실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 상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는데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는데 합의되지 않는 한 결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가난한 부모는 결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남자가 버는 돈이 있으면 제 돈은 일부를 좀 떼서,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 생환비 보조는) 좀 하고는 싶은데, 그게 좀 어렵겠죠. 그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런게 안 되면 저는 솔직히 지금 결혼할 마음은 없어요. 그걸 해주지 못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어쨌든 저는 결혼할 마음은 없어요.”(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그러나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희망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었다. 즉, 본인이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결혼과 출산을 굳이 기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저는 제 입장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 저는 하나라도 좋으니까 낳으면 좋죠. 잘 키우고 싶은데 글썄요 (…). 하나는 외로우니까 최소 둘을”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긴 노동시간을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2237시간) 다음으로 길다. OECD 평균의 1.3배, 그리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1380시간)의 1.6배에 달한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가 될 것이다.

“요즘에 맞벌이나 가사일도 분담해서 해야 하는데 여자들도 일 남자 못지않게 하고 남자들도 일 많이 하는데 서러 도와야하는데 둘 다 와서 녹초가 돼 버리면 신경 쓸 일도 많고, 맨날 시켜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실제로 회사 다닐 때 대리나 그런 분들 보면 애를 안 낳는 게 집에 도착하면 둘 다 10시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된단 한들 시간이 없어서 안 돼.” (연구참여자 2. 24세 남성)

5.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청년고용의 가장 큰 문제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단골로 지목된다. 그리고 이 미스매치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다는 언론과 정치권의 ‘질타’까지 더해진다. 실제 일부 연구들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평균적인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등 학력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이 질타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와 같은 ‘질타’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자면 기대되는 임금과 근로여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반론이 따른다.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체 어디까지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인지 불만이 나온다.

“일자리는 있는데 만약에 힘을 써서 한 7만원 받을 돈이면 5만원 밖에 안준다. (노력에 비해서) 휴무도 거의 없고, 야근수당 그런 거도 없고 (근무 시간도 길고) 네 그런

게 많으니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 한 1-2년 돈 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2. 24세 남성)

“실제로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서.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잖아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되면 취업률이 현실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고. 실제로 취직을 하려면 아무데나 하려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비든 패스트푸드든, 매장직원이든 근데 그 젊은 사람들 하나하나 개개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8. 27세 남성)

그리고 청년고용의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눈높이를 낮추면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본다.

“(청년이 되게 눈이 너무 높다 그렇게 말하는 입장도 있고 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뀌야 한다 중 어느 쪽이세요?) 저는 후자요 (...) 일단 청년들이 전 세대보다 배운 것도 훨씬 많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 눈이 높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사회가 그 정도 소득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힘든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9. 19세 여성)

실제로 서울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제시되는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보수의 일자리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이 연구참여자가 워크넷을 통해 추천받은 기업의 보수는 앞서 제시했던 경총의 대졸초임은 물론이고 고졸초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제일 낮았던 게 1,600이었구요. (세전?) 예. 제일 높았던 게 1,900이었어요”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반면,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눈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눈이 높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나는 꼭 대기업에 가야한다, 나는 꼭 뭐가 돼야 한다. 이런 거에 인식이 있는 건 같아요. 요즘 중소기업도 정말 잘돼 있는 곳도 많다고 들었는데, 조금 눈도 낮추고 하면 자기가 정말 좋아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비교를 안 한다고 했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리고 안정적인걸. 원하다 보니까 더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전 좀 눈도 낮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꼭 대기업만 있는 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적재적소로 이렇게 배열이 돼야 하는데 너무 큰 거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 25세 여성)

“눈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런 강소기업에 취업하려고 이만큼의 스펙을 쌓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자리는 몇 개 없잖아요, 그렇다보니 나는 실패했네 뭐 실업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같고, 사실 일자리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말하자면 급이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는 있는데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거 뿐이지. 페이가 낮거나, 사회적으로 약간 아래에 있는 곳이거나,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구인구직 사이를 볼 때 느낀 게 그거예요” (연구참여자 6. 25세 여성)

일종의 양비론을 주장하는 연구참여자도 있다.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어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취업난이나 이런거 너희가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아니면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고. 그것도 부정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굉장히 눈이 높아진 것도 많은 거 같아요. 옛날에는 케이스가 없어서 내가 도전해서 성공하면 잘된다고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케이스가 너무 오픈된 게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나도 이렇게 되고싶다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취업난이 높아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도전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도전은 하는데 좌절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도저도 항상 중립이에요. 이쪽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지 이쪽도 생각을 한 번해보고” (연구참여자 8. 27세 남성)

6. 성공의 요건

성공의 요건에 대해서는 구조화 된 설문을 이용하였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일부를 이용하였다. 성공하는데 있어서 10가지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10가지 항목은 부유한 집안출신,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 본인의 좋은 학벌, 야망을 갖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사람을 아는 것, 지역 연고, 뇌물을 주는 것, 종교, 성별로 구성된다. 이 항목들은 본인의 노력과 무관한 타고난 가족 환경(부유한 집안 출신,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과 자신의 노력과 의지(본인의 좋은 학벌, 야망을 갖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자본(좋은 사람을 아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환경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달랐다. 중요하다, 보통,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골고루 분포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좋은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 소위 연줄의 중요성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앞서 서술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관행에서도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자리가 없고 그렇게 할 거면 연줄이 필요해요. (...) 편견 없이 내 재능을 바로 보여줄 수 있고, 저는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일도 잘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받는 거보다 편견 없이 보면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빛 날 것 같아서, 일하는 환경이 그런 데가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25세 여성)

제4절 사회통합

OECD는 사회통합의 세 가지 요소로 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이동성을 꼽는다. 이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본 절에서는 이 중 두 가지 요소인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의 보유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사회적 배제

어려서부터 부모의 빈곤을 공유해 온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결핍을 경험해 왔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그니까 저는요 어머니가 그래요. 너네는 왜 뭐 사달라는 이야기를 안하냐? 어릴때 부터 지금까지 뭐 사달라고 안하냐고. 할 수가 없죠.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어린 나이에 눈에도 들어오는데 우리집 정상은 아니구나 이제 들어오는데 저는요 핸드폰도 요 중학교 2학년때 어머니가 너 내가 쓰는 핸드폰 쓸래? 이제 바꿀 때 줘 줬다고 어머니가 남들 컬러 휴대폰 쓰고 할 때 흑백...”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이런 결핍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쉽게 말해서 애들이 토익공부를 하고 하는데 저는 토익학원다니 돈이 없었거든요. 그니까, 있는데 그거를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알바 안 하고 학교 다니고, 알바 안 하고 공부해서 대기 업가고 그러는데 이걸 제 의지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밤새서 하고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냥 좀 그런 것에 대한 불만?” (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현재의 빈곤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어렵게 한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교재비, 수강료 등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받기도 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더 이상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용고사 준비에 대해) 공무원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좀 어느 정도 부모님이 버틸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그게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의 꿈이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빛을 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없으니까”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펙’을 쌓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정장 살 돈이 없어 정장을 입지 않고 면접에 들어간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정장도 안 입고 갔거든요. 심지어. 정장이 없으니까. 그냥 갔는데 우와 사람들은 막 망 하고 화장 막, 메이크업 받고 오고 하니까 기가 확 죽는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제가 말을 잘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막 해도 보여지는게 저는 막 코트입고.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한테는...그런거에서 기가 죽었어요.” (연구참여자 3. 25세 여성)

취업준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빈곤에 의한 차별과 결핍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이 휘말린 사건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연구참여자는 법률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가난 탓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 법적으로 좀 더 다들만한테 이게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변호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해주는 것도. 법원측도 (...) 첫 재판부는 우리한테 되게 호의적이었거든요. 이거는 채무불이행. 채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미성년자랑 계약한거랑 똑같다는 입장이었어요. 저희 승소로 아예 그냥 완전히 원고 기준으로 화해 권고해라 아예. 화해하고 끝내라 했었는데, 재판부가 바뀌고 나니까 인정 못해주겠대요.” (...) 그러니까 법이 정말 약자한테 도움된다고 뭐 전혀 못느끼겠는거예요. 전혀 못느끼겠고. 도대체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전 재판부 입장이 하나도 반영 안되고 송두리째 뒤바뀌고”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2. 사회적 자본

신뢰, 규범, 연결망 등을 지칭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인적자본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일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은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은 부모의 경제력과 인적자본과 독립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근, 2000; 이정선, 2001; 안우환, 2003). 빈곤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쳐 빈곤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류방란 외(2013)는 빈곤층 학생은 가정의 사회적 자본, 교사나 친구사이의 지지와 신뢰 등에 있어서 불리한 경향이 있었고,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 수업태도, 학업성취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에 있어서 완전한 공개채용은 소수의 대기업에서 채택할 뿐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채용과정에서 소개나 추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채용관행은 취업에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용할 환경을 제공한다. 실제, 한 연구에서 취업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는 생애 첫 취업자의 경우 약 40%, 경력직 구직자의 경우 약 60%로 추정하고 있다(김영철, 2010).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은 구인과 구직 사이에서 효과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이직의 경우 임금상승효과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철, 2010).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학업성취와 취업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빈곤층의 경우 학업성취와 취업에 활용할 만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부분의 인적 네트워크가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가 모두 생존하지 않거나 생존하더라도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면 자녀의 인적 네트워크는 취약하게 된다. 사례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이나 취업에 있어서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빈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 할 만한 것은 대부분 친구였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친척, 직장동료, 친구, 이웃, 공무원, 기타 중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묻은 결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구를 꼽았다. 이것은 연구참여자의 학력이나 노동시장 지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한명밖에 없어요. 뭐 인맥을 쌓고 싶어도요 돈이 있어야지 쌓죠. 아님 시간적으로 여유가 돼야지 쌓는데 맨날 집에서는 뭐 터지죠 어디 불안해서 나가지도 못해요. 멀리도 못가요. 뭐 어떻게 합니까”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3. 문화자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여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노동공급을 줄이고 여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Laffer Curve)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가가 주로 문화활동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여가에 대해서 다소 선입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선입견은 복지제도에도 녹아들어 있다. 예를 들면, 기초보장 수급자의 문화생활이나 여행에 대해서 사회적인 견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초보장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를 결정하는데 활용되었던²⁴⁾ 최저생계비 계층에 있어서 여행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보장은 거의 전무하다 할 만하다. 최저 교양·오락비는 ‘서적 및 인쇄물’, ‘교양오락용품·기구’(텔레비전, 카메라, 컴퓨터, 완구 등), ‘교양오락서비스’(영화관람, 티비수신료, 유선방송,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사진촬영 및 현상)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으로 책정된 세부 비목은 ‘고궁 및 박물관’ 관람만이 인정된다. 최저 교통·통신비에 고속버스 요금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명절의 친지방문 용도로 한정된다. 따라서 빈곤층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시설 관람은 ‘고궁 및 박물관’뿐이다. 그리고 명절의 귀성용도 외에 여행에 필요한 교통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수급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상자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하는데 해외여행의 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여행이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고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는 청년단체(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활동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자본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문길·여유진·박창렬·우선희, 2013 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아동의 학업성취는 학력과 학벌을

24)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절대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자격기준과 급여기준을 정하지 않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하는 상대적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매개로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연구진이 만난 연구참여자들 중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대체로 경제적인 여건과 시간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 해외여행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지탱하고 있으며, 미래의 꿈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한 기업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 당첨이 되어 열흘 가량 북유럽을 여행하고 온 경험이 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북유럽 다녀오면서 진짜 나는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세계를 봐야지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연구참여자 1. 25세 여성)

이 연구참여자는 이 경험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여기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돈을 모아서 또 다른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연구참여자가 지금 받은 최저생계비를 쪼개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다른 필수적인 생활을 희생해야만 한다.

제5절 복지경험과 복지욕구

1. 교육·훈련

지역고용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과거 고용센터를 통해 폴리텍 대학 입학에 권유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본인의 적성과 비전에 대한 고려 없는 다소 무성의한 연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보안회사 그만두고 유통 그 사이에 고용센터에 갔는데 그때 마침 거기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폴리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큰 설명 없이 이쪽에 가

서 그냥 컴퓨터 운영과에 가서 그냥 쪽 일해라 그런 식으로 말해서,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힘들거다는 식으로 많이 재촉을 받아서 등 떠 밀려서 갔는데 제가 정보도 없이 가다보니까 수업 듣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연구참여자 2. 24세 남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갖기 어렵다. 보통 우리 청년들은 아주 바쁘다. 특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는 더 그렇다. 청년의 시간빈곤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일에서 학업으로 이행한 한 참여자는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에 완전히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을 힘들게 느낀다.

“저는 공부에 욕심이 많거든요. 지금 나는 자격증을 너무 따고 싶은데,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 공부에 전념하고 싶은데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 남들과 똑같이 해보고 싶은데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힘든 거 같아요. 돈을 안 벌어도 되고, 한 번 훑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1. 25세 여성)

어떻게든 학업을 하는 시기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은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아도 등록금을 완전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생활비는 별도로 충당을 해야 한다. 주로 대출이나 알바에 의존해야 한다.

“1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에서 거의 다 면제가 되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 많이 받는 게 240만원이 국가장학금이거든요. 우리 학교 등록금이 270만원이에요. 30만원이 마이너스거든요. 30만원은 이제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비 대출이 이제 또 쌓이는 거고.” (연구참여자 1. 25세 여성)

국가장학금 지급 시기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된다.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납부 후에 지급이 되어 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우선은 자력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빌려서 납부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변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이자부담은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빈곤계층의 학생들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시기가 당겨지거나, 당겨지지 않을 경우 장학재단에서 학교측에 지급보증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면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당시에 (장학금이) 백만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거의 많이 나와서 저는 그 계 등록금을 내고 돌려받는 식으로 나왔고 (...) 근데 저는 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학교까지 와서, 학교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어쨌든, 그 돈을 받는거니까.”
(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교육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당면한 문제다. 취업 성공패키지의 경우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여타의 프로그램에서는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렵다.

“(생계비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 없어요. 지금 이것(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프로그램)도 3개월인데 솔직히 부담되는 면이 지금 한 3-4주째 인데 그만둔 지가. 네. 수입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 3개월 정도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2. 24세 남성)

현재의 직장에서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 다른 일자리 입사 시기까지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강요된다. 특히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업급여액 인상, 수급대상자 확대, 그리고 수급요건의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는 인상되더라도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대상자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 대상자 확대의 혜택은 주로 고령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청년계층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현재 고용보험 체계에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저도 집세도 당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고, 다른데 어쨌든 정확한 직장도 생길 때까지는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공부를 하고 시험신청하고 그러고 있어요. (...) 그게 지금 가장 크죠. 있어도 한 달 안에 끝나야 하는 거죠. (...) 근데 지금 실업급여를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만두면 제가 나가는 건데, 실업급여를 준다는 보장은 없죠. (자발적 실업이니까 안 되죠?) 네. 그걸 해주는 회사가 흔치 않으니까요.” (연구참여자 4. 27세 여성)

고용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다른 채널을 통해 구인정보를 얻기 어려운 빈곤청년들의 경우 공적인 고용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빈약하다면 취업의 기회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워크넷 경우에는 사실 진짜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정보를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일자리를 물어다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보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 (연구참여자 5. 27세 남성)

2. 공공부조

부모가 없는 연구참여자 4의 경우는 공공부조를 비롯한 다수의 복지제도에서 수급자격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이 경우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고, 이 같은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 사례로부터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특성화고) 다녀보면 애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호적상에는 있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진짜 어려운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복지는 정말 안타깝지만, 저한테 있어 복지는 정말 구할 때 마다 있는 최상의 복지였어요.” (연구참여자 1. 25세 여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가 된다. 그런데 참여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취업연계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자활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받는다. 그런데 청년층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노동통합을 필요로 하고, 뚜렷한 전망을 가져야 할 청년들에게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청년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자활지원.. 그런 것은 많은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일하는 공간은 없을거예요. OO구에 하나가 있던가..” (연구참여자 7. 25세 남성)

전술했듯이 청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로 우선 연계가 되지만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4-4) 청년근로빈곤 연구참여자 특성

번호	나이	성	학력	거주 지역	주거형태/ 주거비	독립 여부	현재직업	과거직업	월소득	비고
1	25	여	전문대 재학	부산	보증금 200/월세 12	○	학생	제조업/ 상용직	55만원	수급자, 부모 사망
2	24	남	고졸(김정고시)	부산	전세	○	지역고용프로그램 참여	서비스업/ 상용직	없음	-
3	25	여	지방 4년제 대졸	서울	임대아파트 (관리비 10만원대)	x	여행사 사무보조(파견)		106만원	부모 부채 3억, 다자녀 가구
4	27	여	수도권 4년제 대졸	서울	쉐어하우스 (월세 및 관리비 50만원)	○	이벤트 회사		145만원	부모 근로능력 없음 어머니 암 질환
5	27	남	서울 4년제 대졸(예정)	서울	임대아파트	x	편의점 알바(주말)	알바	30만원	어머니 알콜중독, 동생 지적장애 3급
6	25	여	지방 4년제 대졸	서울	임대아파트	x	현수막 디자인		130만원	수급자, 다자녀 가구
7	25	여	고졸	서울	임대아파트	x	자활		80~90만원	수급자, 부모 근로능력 없음 아버지 알콜 중독, 오빠 지적장애 1급
8	27	남	전문대졸	서울	임대아파트	x	취성패	서비스업/ 상용직	없음	수급자, 아버지 사망
9	19	여	고졸	서울	아파트(친척 집)	x	대형마트 채과점		150만원 (초과근로수당 포함)	어머니 자영업 월 소득 200만원
10	31	남	수도권 4년제 대졸	경기	월세(관리비 40만원)	○	NGO		106만원	-
11	32	남	중졸(김정고시)	서울	전세(3천만원)	○	취성패	일용직	없음	수급자, 아버지 따로 거주
12	30	남	고졸	서울	임대아파트	x	취성패	서비스업/ 임시직	없음	수급자, 어머니 편찮으심
13	23	여	중졸	서울	전세(6천만원)	x	취성패	서비스업/ 상용직	없음	수급자, 어머니 자영업
14	32	남	서울 4년제 졸업	서울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	없음	도소매업/ 상용직	없음	수급자, 아버지 사망

제 5 장

결론과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일군의 서구 사회학자들과 같이 이행기의 관점에서 청년을 본다면 이들에게는 성인이 되기 위한 일자리, 집, 그리고 가정으로의 이행이라는 과업이 주어져있다. 사례연구에서는 근로빈곤청년들의 이 세 가지의 과업을 어떻게 수행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직업이행에 관한 사례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졸업 후 이미 일 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직업이행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일 자리를 최종적인 일자리로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는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집안 사정상 괜찮은 일 자리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다지지 않고 당장 주어진 일 자리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직장(첫 직장)의 임금이나 여타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보다 나은 일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욕구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직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참여자는 없었다. 자신의 경쟁력에 자신이 없고, 또 자신의 경쟁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 자리의 질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학업으로 이행하는 사례도 있었고,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고용서비스를 통한 교육훈련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완료했다가 다시 원점(학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마치더라도 새로운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새로운 일 자리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직업이행 상황을 종합해보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단계의 이행인 주거와 가정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직업이행을 완료한 연구참여자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차 관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3차 관문은 요원하게 느껴진다.

다음은 주거이행이다. 청년들의 주거이행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빈곤 청년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 높은 임대료 수준은 이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고시원이나 쪽방 등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조금 괜찮은 집을 임대하더라도 높은 주거비는 다른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의미하는 가족이행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이행과 주거이행이 결혼이행의 선결조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행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행의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 사례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지금 상황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성친구가 있는 연구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꿈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 한 꿈으로 남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또 일자리의 문제로 귀착된다. 현재, 일자리의 경제적 보상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결혼은 이성교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성교제에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이다. 그런데 근로빈곤 청년들은 매우 바쁘다. 서비스 업종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이들은 장시간의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조건에서 연애를 통한 결혼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빈곤 청년들의 성인으로서의 이행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우선 이들의 이행 과정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행에 있어서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구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이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제2절 정책제언

“빈곤 위험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노동시장이 부여하는 기회로서 구조적 요소들이 개인적 특성 및 상황만큼이나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취업을 부추기는 정책은 반복 빈곤을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빈곤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없다. 분석 결과는, 자유주의적 레짐이든 보수적 레짐이든 간에, 구직활동을 자극하고 숙련향상을 도모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안정성과 전망 있는 고품질 핵심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Tomlinson and Walker. 2012).

근로빈곤, 특히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은 “안정성과 전망 있는 고품질 핵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나, 그리고 당사자인 청년들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의 일자리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노동과 자본의 최적의 조합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건을 크게 흔들만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는 민간기업과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인건비 총액을 내부에서 배분하는 문제로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제를 준수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존재하고²⁵⁾, 고용의무제를 이행한 기관에서도 정규직이 아니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이를 실적으로 제출한 공공기관도 다수 존재한다²⁶⁾.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시장이나 공공기관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

25) 2014년 270개 공공기관 중 45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중 10개 기관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기획재정부에서 김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조선비즈 “지난해 4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안 지켜” 2015.9.14.에서 재인용).

26) 2014년 391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총 1만4549명의 청년을 채용해 전체 정원대비 4.8%로 기준치(3%)를 초과했지만, 조사대상 100개 중 40개 기관에서 보고한 282명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인턴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에서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프레시안 “하루짜리 계약서도 실적에... ” 정부, 청년 채용 부풀리기“. 2015.9.11.).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같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정부의 시책을 성실히 따르려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를 수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턴제나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 일자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근로빈곤의 해법으로 제시할 만한 사회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청년들의 직업-주거-가정 이행의 각 단계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의 정책적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현재 근로빈곤층 지원

가.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범위 확대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꼽을 수 있다. 2008년도 시행 이후 적용대상자와 근로장려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제도확대가 이루어졌다.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용하던 것을 결혼 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개편,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도입, 그리고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지원을 통해 빈곤탈출의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확대개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유자녀 가구 중심으로 하고 있어 미혼의 청년근로빈곤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문제가 있다. 무자녀 단독 가구 중 현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연령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기는 하지만 2017년까지 4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가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으로 인한 효과적인 탈빈곤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약

1,400백만명(전체의 밀레니얼 세대의 1/5 이상)의 저소득 밀레니얼세대(18~34세)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고 있고, 다수의 연구들은 이들 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자녀들의 건강, 학업성적, 대학진학가능성, 성인기 근로활동 및 높은 소득의 가능성 등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CBBP, 2015). 그러나 미국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두 가지 지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저소득 부부, 셋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 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와 자녀장려세가 2017년에 종료될 예정에 있어 약 630만명의 밀레니얼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다. 두 번째는 무자녀(단독)가구와 양육권이 없는 부부가구와 일반 수급가구 사이의 큰 격차 문제다. 약 410만명의 무자녀 근로자에게 과세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소액에 불과해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무자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제기했다. 연초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경제(Middle Class Economics)를 핵심적인 주제로 제기하면서 근로유인 증진을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제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라이언(P. Ryan) 위원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제안은 자녀가 없는 21세에서 25세까지의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약 86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BBP, 2015). 그리고 2017년에 소멸될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세입위원장의 제안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 봐야겠지만 중산층 복원을 위한 과제로 청년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역시 소득기준과 급여수준을 대상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유자녀 근로빈곤 청년에 대한 소득기준과 급여수준의 상향, 재산기준의 하향 등의 방안과 더불어 무자녀 근로빈곤 청년에 대한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재정부담 가능성과 그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나. 최저임금 현실화 검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인상을 제기하였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유효수요 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임금인상률이 평균 2.6%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독일은 2015년 평균 3.5%의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20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경제'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현재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40% 인상)을 제기하였다. 이후 시애틀을 비롯한 전역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수요를 일으켜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부(-)의 효과도 동시에 가진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고용률을 하락시킨다. 두 가지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된다. 하나는 '노동비용 상승→제품가격 상승→소비감소→기업활동 위축→고용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등 설비투자 비용 감소→자동화 시스템 확충→고용 감소'의 논리다.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존재한다.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증가→수요증가→기업활동 확장→고용 증가 또는 불변'의 논리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카드 버클리대 교수와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가 최저임금 상승 사례들을 조사한 연구 결과 임금을 적당한 수준으로 인상했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Card & Krueger, 1994).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교수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2016년까지 최저 시급을 10.10달러로 인상해야한다는 서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2월 보고서에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10.10달러)은 2016년 상반기까지 일자리 50만개 줄이는 대신 90만 가구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고, 1,65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이나 노동자나 손익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2016년도 최저임금이 금년 5,580원에서 450원이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263천원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 등이 경기활력을 위한 해법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분위기에 경제당국이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하는 등의 분위기에 따라 대폭적인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의 바램과는 달리 450원 인상에 그쳤다.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청년근로빈곤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월 최저임금은 빈곤선(중위소득의 50%)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빈곤을 개선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²⁷⁾ 빈곤선 조금 위에 있는, 차상위라 불릴 수 있는 계층의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영세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임금 상한선으로 작동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의 해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최저임금 적용률이 나 미달률이 청년층에게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안을 절충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청년근로빈곤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상폭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한 청년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영세사업장에 속한 청년들은 웬만한 규모의 기업의 비정규직보다 처우가 좋지 않다. 그러나 앞서 통계에서 확인했듯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청년근로빈곤 문제 해결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생산과 소비의 든든한 주체가 되어야 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비정규직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은 정부가 재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등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기간제 사용자

27)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4년도 중위소득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약 1,879천원이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하는 상대적 빈곤선은 939.5천원이 된다. 한편,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월 209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1,166천원이 된다.

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비정규직 처우와 청년근로빈곤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통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축소,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이를 통한 고용안정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미래 근로빈곤층 지원: 취업역량 강화

가. 청년빈곤층 취업역량 강화

취업역량은 결국 인적자본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인적자본을 키우는 것은 결국 교육의 몫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책제언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인적자본을 제외한 취업역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당장 구직단계에서 필요한 자원들일 것이다.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채용에 있어서 여전히 학력을 중시하고, 어학성적이나 해외연수 등의 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이 유발하는 다양한 이유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빈곤청년들의 경우 이 같은 스펙을 형성하지 못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빈곤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공공형 청년취업지원관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김정훈, 2015). 현재, 일부 대학에서 ‘취업지원관제도’나 지자체에서 ‘청년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지원관제도는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만 설치되어 있어(2015년 20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²⁸⁾ 금년 하반기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21개 대학에 설치가 되었고, 내년에 20개 대학에서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의 대학 내 분산되어 있는 취업과 창업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재학생 뿐 아니라 타대생과 인근 지역민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했다. 그러나 재학생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취업 스펙을 위한 취업사교육에 청년들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취업준비 교육을 ‘공공형 취업지원관제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으로 꼽는 것이 주로 어학성적과 자격증, 그리고 해외연수 경험 등이다. 현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학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취업에 필요한 면접 기술 등에 대한 욕구도 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해 어학, 자격증을 위한 수강을 할 경우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 자발적 실업자가 취업스펙을 위한 준비(학원 수강 등)를 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수당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근로빈곤층의 기초보장 수급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을 위한 사용용도 중 스펙형성과 관련된 용처(예컨대, 해외연수)를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취업연계 서비스 강화

현재 근로빈곤층의 낮은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어,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취업지원은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빈곤한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에 대한 좋은 일자리 매칭은 청년근로빈곤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취업지원은 크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고용센터와 같은 취업연계 서비스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역량을 끌어올리는 차원이다.

먼저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패키지Ⅱ유형)의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 중장년층으로 대상이 넓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년 중에서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학교에서 제대

28)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청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제한적(연간 2천명 내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정훈, 2015)

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학생들의 경우는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청년고용절벽해소 대책에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저소득 청년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빈곤청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고용센터에 복지지원 연계기능을 추가한 고용복지+센터 역시 복지서비스 연계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청년의 빈곤문제는 단순한 고용연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다양한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펼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빈곤청년이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도 청년에 대한 특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가 되지만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다가 일을 그만 둔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지만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청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다시 자활로 돌아온 청년들의 경우 다시 취업성공패키지로 전환해서 탈빈곤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자활에서 탈빈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에 특화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다. 사회적 자본, 문화자본 확충

취업역량 강화방안 중에서 상기 두 가지 제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년근로빈곤층의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이들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부적인 제안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 보유현황과 이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각 자본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는 일련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3. 장기적·포괄적 접근법

가. 정부의 취약계층 직접고용

정부가 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정부가 시장과 공공기관을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정부가 고용에 나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그렇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정부가 직·간접적인 고용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관련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흡수력은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서 청년근로빈곤의 대안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년근로빈곤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자활근로와 같은 제도가 이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청년실업에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국가(Employer of Last Resort, ELR)’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포스트 케인지언(Post Keynesian) 경제학적 사고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최후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후의 고용주 프로그램은 정부가 모든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기준임금을 받고 일할 준비, 의지, 능력을 가진 모든 무직자를 정부가 고용하는 공공정책이다. 이 같은 개념은 실업은 통화현상(monetary phenomenon)으로 보고, 이윤추구의 자본주의경제가 진정한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것에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진단에 근거한다. 케인즈 자신은 정부는 전쟁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즉 1% 이내의 실업률을 위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Keynes, 1980, p. 303). 이 같은 엄밀한 완전고용의 정의는 ELR 제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사실 정부가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념은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것이었다(Kaboub, 2007). 대공황 이후 연방정부가 실업자로 전략할 수 있었던 34%의 근로자를 고용한 뉴딜(New Deal) 정책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세계적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증대하면서 고용에 있어서의 기존의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은 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의 경기충격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시장의 고용주로서의 역할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관련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복지국가 발달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정부의 고용도 확대가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있어서는 국가가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ELR 프로그램을 시도한 바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가 고용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돌봄,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였다. 물론, 최근 세계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도 이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Kroos & Gottschall, 2012), 이 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고용주로서의 역할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여하튼,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에 기반한 노동수요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고용주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ELR은 노동에 대한 영구적인 탄력성을 제시한다는 점, 가장 인적자본이 낮은 구직자들부터 고용을 하게 된다는 점, 경기충격의 완충재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임금과 물가의 안정장치로 기능한다는 등의 장점도 가진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항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Tcherneva, 2012).

앞서 언급한 미국의 뉴딜과 함께 실제로 ELR의 개념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의 Jefes(Unemployed Heads of Household Plan), 인도의 국가지방고용보장(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프랑스의 직업이행계약(Professional Transition Contracts) 등이 그것이다(Kaboub, 2008; Hurdford, 2012 재인용).²⁹⁾ 이들 프로그램들이 도입된 배경이 다르고, 성패의 조건 또한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의 성격과 성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경제정책과 전반적인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저소득층 고용과 관련된 여타의 정책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이 같은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정책, 특히, 인적자본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고용정책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청년종합실태조사 실시

앞서 우리나라에 청년근로빈곤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의 활용가능한 자료를 통합하는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빈곤을 추정뿐만 아니라 청년근로빈곤, 나아가 청년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정책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청년근로빈곤의 범주를 넘어 청년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통계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단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패널조사는 횡수가 거듭될수록 전국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4·15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청년층 취업실태 및 기획 의식 조사가 실시되기는 했지만 주기적인 조사가 아니고 주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청년층의 성장환경, 교육, 가구경제, 생활실태, 근로, 인식 및 욕구 등을 포괄하는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청년들의 다양한 인적자본, 사회문화자본,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각 특성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욕구를 진단하고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책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성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이행을 이해 필요한 사회정책에 대한 함의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종합실태조사

29) 자세한 프로그램의 특징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Hurdford(2008)을 참조하라.

는 청년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노동시장, 복지, 빈곤,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 강세욱. (2015).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강신욱, 노대명, 신호성, 현영진. (2008).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대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4-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은. (2014). 이행기 청년이 걸어갈 길. 서울시청년허브.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pp. 82-112.
- 권지웅, 이은진. (2013).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2013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 pp. 597-614.
- 금재호. (2005).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pp. 41-73.
- 금재호. (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논총, 9, pp. 327-354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pp. 21-40.
- 김경아. (2008).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의 불평등 현황과 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14(1), pp. 25-51.
- 김경혜, 김준현, 박은철. (2010). 2010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기현. (2004). 최근 일본 청년 노동시장 진단: 프리터(freeter)를 둘러싼 쟁점들, 국제노동브리프, 2(2), pp. 3-9.
- 김문길, 김태완, 박신영, 이병희, 임병인, 이서현. (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박창렬, 여유진, 우선희. (2013).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희. (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 사례연구. THE HRD REVIEW, 18(1), pp. 98-115.
- 김문희. (2015). 금융위기 이후 청년 니트(NEET)층의 도전 과제와 관련 정책, THE HRD REVIEW, 18(3), pp. 72-87.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pp. 49-72.
-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pp. 215-260.

- 김영철. (2010). 인적 네트워크(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유빈. (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노동리뷰, 7, pp. 5-14.
- 김을식. (2015). 청년고용 부진에 대한 진단과 처방. 경기연구원
- 김정훈. (2015). 경기도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 정책방안. 경기연구원
- 김태완, 김문길, 정진옥,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등.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승. (2004). 주거비지불능력 개념에 기초한 주거비보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삼. (2009). 한국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나승호, 조병준, 최보라, 임준혁. (2013).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15, pp. 1-46, 한국은행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 pp. 22-33.
- 남재량. (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3, pp. 29-40
- 남재량. (2014). 청년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 2014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추계 정책토론회 자료집.
- 노대명. (2002).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58, pp. 78-93.
- 노대명, 황덕순, 유진영, 이은혜, 원일. (2007).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pp.109-134.
- 민병희. (2010). 세계화 시대의 청년빈곤계층-한국의 니트족·프리터족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 2010 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pp. 1,209-1,221.
- 박권일. (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나 성장의 단계나. 황해문화, 64, pp. 63-76.
- 반정호. (2010). 청년층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가구단위의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10, pp. 3-15
-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3), pp. 257-279.
- 석상훈. (2007). 빈곤의 지속: 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3(3), pp.79-99
- 손훈정. (2009). 청년니트(NEET) 해부-청년니트족 현황과 대책, ISSUE PAPER, 139, pp. 1-25. 전국경제인연합회.
- 신윤정, 권지용, 정준영, 김민수, 황서연, 한영섭, 등. (2015). “서울이 만드는 다음 세대의 여지 청년이 만드는 다음 사회의 공공”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 청년허브.
- 안수찬. (2011). 그들과 통하는 길. 사람과 정책, 1(창간호), 민주정책연구원
- 안우환. (2003).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30(3), pp. 161-184.

- 우석훈, 박권일. (2007).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88만원 세대. 레디앙.
- 윤희숙. (2013). 근로빈곤층의 빈곤현황과 정책평가. 보건복지포럼, pp. 33-41.
- 이덕로, 노대명, 이지호. (2014). 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Oughtopia, 29(2), pp. 179-214.
- 이병희. (2009).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경제발전연구, 15(1), pp. 69-93.
- 이병희. (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pp. 93-116.
- 이병희. (2012). 근로빈곤 정의를 둘러싼 쟁점과 추정. 보건복지포럼, pp. 18-26.
- 이병희, 반정호. (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동향과 전망, 통권(75), pp. 215-244.
-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pp. 53-76.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자료집, pp. 569-581.
- 이정선. (2001).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업성공과 사회자본 관계: 문화기술적 연구. 96, 학설진흥재단 신진교수과제 연구보고서.
- 장석인. (2010). 선진국들의 청년층 실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논총, 20(4), pp. 211-244.
- 장흥근, 이정봉, 김선영. (2012). 불안정노동 청년층의 대안적 사회안전망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함께 일하는 재단.
- 전승환, 이한별. (2015). 일학습병행제의 현황, 성과 및 향후 과제. THE HRD REVIEW, 18(1), pp. 6-29.
- 정순희, 임은정. (2014). 청년 1 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pp. 1-19.
- 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 (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준영. (2015). 청년에 대한 투자에서 보장으로, 청년정책의 재구성: 패러다임의 전환. 2015 서울청년주간 N개의 컨퍼런스 자료집, pp. 1-13.
- 조준모. (2009).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 진미윤. (2013). 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보건복지포럼, 3, pp. 42-55.
- 최은영. (2012). 교육을 통한 가구소득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지은, 홍기석. (2011).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3), pp. 143-163.
- 통계청. (2015).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2015. 5. 28).

- http://kostat.go.kr에서 2015년 10월 15일 인출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http://kostat.go.kr에서 2015년 10월 15일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 한국은행. (2015).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5-7호, 한국은행.
-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19-142.
- 홍경준. (2009). 근로빈곤, 그 생성과 확대의 사회경제적 메커니즘. 황해문화, 통권(64), pp. 163-185.
- Atkinson, A. B. (2003).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contrasting social welfare and counting approaches.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1), pp. 51-65.
- Bladen, J. & Gibbons, S. (2006). *The Persistence of Poverty across Generations: A View from Two British Cohorts*. Bristol, UK: The Policy Press
- Carcillo, S., Fernández, R., Königs, S., & Minea, A.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6, pp. 1-108.
- Card, D. & Krueger, A. B. (1993).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4509, pp. 1-57.
- Fend, H. (1994). The youth Context of Trasition to Work and Youth Unemployment. In Peterssen. J. T.(ed). *Youth Unemployment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genaars, J., & Vos, K. (1988).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2), pp. 211-221.
- Hurdford, P. (2012). *The Employer of Last Resort: A Policy to Ensure Full Employment and Greater Price Stability*. Dension University Summer Scholar Project.
- Kaboub, F.(2007). Employment Guarantee Programs: A Survey of Theories and Policy Experiences. *Working Paper 498*, Annandale-on-Hudson, NY: The Levy Economics Institute (May).
- Kaboub, F. (2008). Employer of Last Resort, In Philip O'Hara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Volume Two: Economic Policy*, Perth

- Australia: GPERU.
- Keynes, J. M.(1980). *Activities 1940-46. Shaping the Post-War World: Employment and Commodities*. Volume XXXII of *Collected Works*, D. Moggridge (ed.). London, UK: Macmillan.
- Moisio, P. (2004). A latent class application to the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poverty. *Quality and Quantity*, 38(6), pp. 703-717.
- OECD. (2011a).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 Rising*(2011.12). <http://www.oecd.org/els/soc/dividedwestandwhyinequalitykeeprising.htm>.
- OECD. (2011b). *Youth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Accessed on 06 August 2015).
- OECD. (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Paris, <http://www.oecd.org/employment/Action-plan-youth.pdf>.
- OECD. (2014a).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Paris, OECD.
- OECD. (2014b). *Promoting better labour market outcomes for youth*. Retrived from <http://www.oecd.org/g20/topics/employment-and-social-policy/OECD-ILO-youth-Apprenticeships-G20.pdf>.
- OECD. (2014c). *Rising inequality: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Retrived from <http://www.oecd.org/els/soc/OECD2014-Income-Inequality-Update.pdf>.
- Lavinia, P. (2008). Leaving Home and the Chances of Being Poor. *ISER working paper NO. 12*,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 Tcherneva, P.R. (2012). Beyond Full Employment: The Employer of Last Resort as an Institution for Change. *Working Paper No. 732*.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 Ringen, S. (1988).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17(3), pp. 351-365.
- Woodman, D. (2010). class, individualisation and tracing processes of inequality in a changing world: a reply to Steven Roberts.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pp.737-746.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15). 청년 취업·창업 리부팅, 나라경제 기획, 8월호
<http://www.economy.go.kr>에서 2015. 10. 15 인출
- 김경락. (2015. 7. 28). 청년 20만명 고용 추진, 절반이 인턴, 직업훈련. 한겨레.
<http://www.hani.co.kr>에서 2015. 11. 10 인출
- 김용래. (2015.10.27). 주요 대기업, 신입사원에 너나없이 경력·스펙요구.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에서 2015. 11. 10 인출
- 박용규. (2015.11.06). 노인 잡아야 당선...내년 총선 60세 이상 투표수, 20대의 2배, 머니투데이.
<http://the300.mt.co.kr>에서 2015. 11. 10 인출
- 박의래. (2015. 9. 14). 지난해 4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안 지켜.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에서 2015. 10. 15 인출
- 이윤주. (2015. 1. 09). 정규직 시간제 3배 늘었지만...정부 공언 '양질 일자리'는 줄어.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에서 2015. 10. 15 인출
- 최하얀. (2015. 9. 11). 하루짜리 계약서도 실적에... “정부, 청년 채용 부풀리기“.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에서 2015. 10. 15 인출
- 한겨레. (2015. 10. 19). 청년유니온 2013년 미용업계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http://h21.hani.co.kr>에서 2015. 11. 10 인출
- 허완. (2015. 1. 14). ‘현실 속 장그래’를 보여주는 10가지 숫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에서 2015. 10. 15 인출